

한일 시민 100인 미래 대화

2017.11.9.(목)-11.11.(토)
제주 서귀포시 휘닉스아일랜드

목차 | Contents

I. 행사개요	5
II. 행사일정	6
III. 개회식 연사	8
IV. 토론 참가자	10
1. 한국참가자	10
2. 일본참가자	13
3. 분과별 토론참가자	17
4. 한국 사회자 및 발제자 소개	21
5. 일본 사회자 및 발제자 소개	24
V. 발제문	27
1. 분과토론 1: 인적교류 및 문화협력	29
1) 「한일 인적교류와 문화협력: 현황과 전망」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31
2) 「시민주체, 과제의 직시, 한·일·재일코리안의 연대와 공유 : 가와사키(川崎)를 사례로」 야마다 다카오(가와사키·부천 시민교류회 사무국장)	39
2. 분과토론 2: 과학기술 협력	49
1) 「원전사고를 통해 생각하는 에너지와 환경문제」 도리이 히로유키 (도쿄대 준교수)	51
2) 「한·일 ‘화해학’을 시작하자: 과학기술·인문·사회융합적 ‘재난·안전공동체’ 구축을 위한 제언」 김영근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교수)	61
3. 분과토론 3: 인구문제 및 사회복지협력	73
1)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 진필수 (서울대 일본연구소 연구교수)	75
2) 「인구문제와 사회복지의 협력: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간병과 치료」 후루야 유키히로 (동남아시아의 장애아동에게 활체어를 기증하는 모임 부대표)	85
4. 분과토론 4: 풀뿌리 협력	95
1) 「풀뿌리 교류에서 협력으로」 이소자키 노리요 (가쿠슈인대 교수)	97
2) 「한일 풀뿌리 교류협력의 걸림돌과 디딤돌」 박명희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	107

I. 행사개요



■ 사업목적

한일 양국의 전문가, 학자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NGO, 일반시민들이 최근 동북아 정세 변화 이슈는 물론 양국 사회가 고민중인 공통의 현안에 대한 창의적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굳건한 기반 조성

■ 주최기관: 한국국제교류재단(KF), 서울대 일본연구소, 도쿄대 한국학연구센터

※ 협력대학: 한-일 총 7개 대학

(한국)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일본) 와세다대 한국학연구소, 리쓰메이칸대 코리아센터, 규슈대 한국연구센터

■ 개최기간: 2017.11.9.(목)-11.11.(토)

■ 장소: 제주 서귀포시 휘닉스아일랜드

■ 참가인사: 총 100명 (각 국 50명) (*일반시민 비중 70%)

■ 대주제: “공통의 과제와 기회: 한일 협력과 공동 대응”

■ 회의 구성: 총회 및 4개 분과토론

- <분과토론 1> 인적교류 · 문화협력: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 등
- <분과토론 2> 과학기술 협력: 에너지, 안전, 환경, IT, 제4차 산업혁명
- <분과토론 3> 인구문제와 사회복지 협력: 저출산 · 고령화, 청년 일자리, 개호 및 의료
- <분과토론 4> 풀뿌리 협력: NGO, 지자체 등

II. 행사일정



일시	일정(안)	장소
11월 9일(목)	1일차	
13:00-18:00	참가자 등록 및 숙소 체크인 <숙소: 제주 서귀포 휘닉스아일랜드>	메인동 로비
15:30-18:30	[문화체험활동]	
19:00-21:00	참가자 만찬	성산 해마루
11월 10일(금)	2일차	
09:30-10:00	등록	아일랜드볼룸 로비 (2F)
10:00-10:40	[개회식] ▪ 개회사: 서승열 한국국제교류재단 감사 (前 주코트디부아르 대사) ▪ 환영사: 한영혜 서울대 일본연구소장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한국학연구센터장 ▪ 축 사: 서정하 제주평화연구원장 히다 유이치 고베학생청년센터관장	아일랜드볼룸 AB
10:40-11:00	[문화공연] 피아노 연주(최선애 피아니스트)	
11:00-11:10	기념사진 촬영	
11:10-11:25	오찬 장소로 이동	
11:25-13:00	오찬	글라스하우스 민트 (2F)
13:00-15:20 (동시 진행)	[분과토론 1] 인적교류 및 문화협력 ▪ 사회: 이종원(와세다대 교수) ▪ 한국 발제자: 남기정(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한일 인적교류와 문화협력: 현황과 전망」 ▪ 일본 발제자: 야마다 다카오(가와사키부천 시민 교류회 사무국장) 「시민주체, 과제의 직시, 한·일·재일코리안의 연대와 공유: 가와사키(川崎)를 사례로」 [분과토론 4] 풀뿌리 협력 ▪ 사회: 서승원(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장) ▪ 일본 발제자: 이소자키 노리요(가쿠슈인대 교수) 「풀뿌리 교류에서 협력으로」 ▪ 한국 발제자: 박명희(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 「한일 풀뿌리 교류협력의 걸림돌과 디딤돌」	아일랜드볼룸 C
15:20-15:40	Coffee Break	아일랜드볼룸 로비 (2F)

일시	일정(안)	장소
15:40-18:00 (동시 진행)	[분과토론 2] 과학기술 협력 ▪ 사회: 박철희(서울대 국제대학원장) ▪ 일본 발제자: 도리이 히로유키(도쿄대 준교수) 「원전사고를 통해 생각하는 에너지와 환경문제」 ▪ 한국 발제자: 김영근(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교수) 「한·일 ‘화해학’을 시작하자: 과학기술·인문·사회융합적 ‘재난·안전공동체’ 구축을 위한 제언」	아일랜드볼룸 C
	[분과토론 3] 인구문제 및 사회복지협력 ▪ 사회: 안자코 유카(리츠메이칸대 교수) ▪ 한국 발제자: 진필수(서울대 일본연구소 연구교수)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 ▪ 일본 발제자: 후루야 유키히로(동남아시아의 장애아동에게 휠체어를 기증하는 모임 부대표) 「인구문제와 사회복지의 협력: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간병과 치료」	스톤홀
18:00-18:20	만찬장소로 이동	
18:20-20:30	공식 환영만찬 [문화공연] 한국무용	아일랜드볼룸 AB
11월 11일(토)	3일차	
09:00-11:00	[종합토론] ▪ 사회: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 ▪ 토론자: 분과토론 사회자 및 발제자 전원(12명)	아일랜드볼룸 AB
11:00-11:15	Coffee Break	아일랜드볼룸 로비 (2F)
11:15-11:30	[한일 시민 100인 선언문 발표]	
11:30-11:45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브리핑] 유운호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참여홍보팀장	아일랜드볼룸 AB
11:45-12:00	▪ [2020 도쿄하계올림픽 브리핑] 후지모토 루나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홍보담당 계장	
12:00-13:30	환송오찬	아일랜드볼룸 C

III. 개회식 연사

(일정순)

서승열 徐承烈 SURH Sung-yol

한국국제교류재단 감사

2016년 10월 15일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 감사로 재임중이다.

주대만 부대표(2007-2010), 주키르기즈스탄 대사대리(2010-2012), 주코트디부아르 특명전권대사(2012-2015) 등을 역임하였다.

한국외국어대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였다.

한영혜 韓榮惠 HAN Young Hae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장

한영혜 교수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일본 츠크바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교수는 2006-2012년에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소장을 지냈으며 2017년6월부터 다시 동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8월 까지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위원, 2016년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 위원 및 여교수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또한, 2014년과 2015년에 한국사회사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한교수는 『도쿄메트로폴리스: 시민사회, 격차, 에스니시티』 (편저, 2012), 『다문화사회 일본과 정체성 정치』 (공저, 2010), 『일본의 지역사회와 시민운동』 (2004), 『일본사회개설』 (2001) 외 다수의 단행본과 「협정영주권과 재일한인 정체성의 재구성: '조선'과 '한국'-경계짓기와 경계넘기」 (2017), 「재일조선인과 본국의 새로운 관계: '조선'에서 '한국'으로 '국적변경'을 한 3세를 중심으로」 (2011, 일본어), 「현대 일본의 시민운동에서 '생활'의 의미」 (2011) 외 다수의 논문을 출판했다.

기미야 다다시 木宮正史 KIMIYA Tadashi

도쿄대학 한국학연구센터장

기미야 다다시는 1960년생이며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한 후 1986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함으로써 1980년대 후반의 한국의 민주화 물결을 몸으로 체험했다. 일본으로 귀국한 후 박정희 정부 초기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정치과정을 주제로 한 박사논문을 씀으로써 1992년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 일본 호세이대학 법학부 조교수로 취임하고 96년에는 도쿄대학 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로 옮겼으며 준교수, 교수가 되었다. 그 사이에 미국 Harvard University Yenching Institute, Visiting Scholar, 또한 도쿄대학 대학원 정보학관 교수 그리고 현대한국연구센터 센터장을 역임했다. 2014년 도쿄대학 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 한국학 연구센터를 창립함으로써 현재에 이르렀다.

주요단저로서 『국제정치속의 한국현대사』, 『한국민주화와 경제발전의 다이내미즘』, 『내셔널리즘으로 본 한국근현대사(근간)』, 『박정희 정부의 선택: 1960년대 수출지향형 공업화와 냉전체제』, 『일본의 한반도 외교』 등이 있다.

공편저로서는 『한일관계사 1965-2015 (한일동시출판)』 『전후한일관계사』 『역사로서의 한일국교정상화』 『시리즈 일본안전보장6 한반도와 동아시아』 등이 있다. 전공은 한반도 지역연구와 국제관계론이다.

서정하 徐正河 SUH Chung-ha

제주평화연구원장

서정하 원장은 1979년 외교부에 입부 후 스웨덴, 일본, 이집트, 오스트리아 등에서 근무했으며, 바세나르체제 이사회 의장(2005),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특보(2005~2006),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부장(2006~2008), 주헝가리대사(2008~2011), 서울특별시 국제관계자문대사(2011~2013), 주싱가포르대사(2013~2016)를 역임하였으며 2016년 11월 제5대 제주평화연구원장으로 취임 후 재직중이다. 특히, 약 5년간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 근무 및 게이오 대학 객원연구원 연수를 거친 대표적 지일 외교관이다. 서정하 원장은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미국 Johns Hopkins University에서 국제 공공 정책학 석사(SAIS)를 취득했으며, 2012년 중앙대학교에서 국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히다 유이치 飛田雄一 HIDA Yuichi

고베학생청년센터관장

1950년 일본 고베시 출생. 고베대학 농학부 석사과정 수료. 공익재단법인 고베학생청년센터관장. 강제동원 진상규명네트워크 공동대표. NGO 고베외국인 구원네트워크 대표. 무궁화모임 회원. 간사이학원대학 비상근강사. 기독교를 모체로하는 고베학생청년센터는 1978년 한일도시산업선교협의회를 시작으로 한국 기독교단체, 카톨릭농민회 등과 교류를 해왔다. 1995년 한신대지진 시에는 센터 또한 피해유학생 지원활동을 나섰으며, 고베지역의 피해외국인지원에도 NGO 고베외국인 구원네트워크 자격으로 앞장섰다. 조선인 강제연행·강제노동조사를 위한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사무국도 담당하고 있으며, 한일시민 교류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저서로는 『일제 하 조선농민운동: 조선농민 사·적색농민조합』 (未来社 1991.9), 『조선인·중국인강제연행·강제노동자료집』 (1990년판·94년판·김영달과 공저'神戸学生青年センター出版部) 『현장을 걷고 현장을 잇는다: 일본, 한국, 기독교』 (かんよう出版 2016.6), 『마음에 새기고, 돌에 새긴다: 재일코리안과 나』 (三一書房 2016.11), 『여행작가가 된 기분: 한국,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로의 여행』 (合同出版 2017.1) 외.

IV. 토론 참가자



1. 한국참가자

(가나다순)

연번	이름	직책 및 소속
1	KANG Heui-Seok 강희석 (姜熙錫)	Principal Researcher,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2	KWON Soonseok 권순석 (權純奭)	CEO, Arts & Culture Consulting Group 문화컨설팅 바라 대표
3	KWON Yong Rae 권용래 (權容來)	Head, Kwon Visual Arts Institute 권용래 조형연구소 소장
4	KIM Young Geun 김영근 (金映根)	Professor, Global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Korea University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교수
5	KIM Yunkyung 김윤경 (金允驚)	Vice President, SIR Team, Mizuho Bank, Ltd. Seoul Branch 미즈호은행 서울지점 부장
6	KIM Jaehun 김재헌 (金哉憲)	CEO, VREDU CO., Ltd. (주)브이알에듀 대표이사
7	KIM Jin Seon 김진선 (金進宣)	Manager, VITE Design Group Inc.
8	KIM Hye Kyong 김혜경 (金惠京)	Senior Consultant, KIM & CHANG 김앤장법률사무소 실장
9	NAM Kijeong 남기정 (南基正)	Professor,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10	NAM Ji Won 남지원 (南智媛)	Teacher, Yu Seong Middle School 유성중학교 교사
11	Rho HeSub 노희섭 (盧熙燮)	Director, ICT Convergence Division 제주도 ICT융합담당관실 담당관
12	PARK Myung Hee 박명희 (朴明姬)	Research Professor,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
13	PARK Mi Suk 박미숙 (朴美淑)	Director, Metabolic Syndrome Management Center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지원단 팀장
14	PARK Cheol Hee 박철희 (朴喆熙)	Dean,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15	PARK Hong Suk 박홍석 (朴洪奭)	Designer, DESIGN MINE 디자인마인 대표
16	BAE Gyung Min 배경민 (裴敬珉)	Researcher, Non Government Organization Welfare Society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연번	이름	직책 및 소속
17	PAIK Kyung Hak 백경학 (白庚學)	Executive Director, Purme Foundation 푸르메재단 상임이사
18	SEO Dongju 서동주 (徐東周)	Professor,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19	SUH Seung-Won 서승원 (徐承元)	Director, Global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Korea University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원장
20	SUH Johng Wan 서정완 (徐禎完)	Director,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Hallym University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소장
21	SONG Whan-Bhum 송완범 (宋浣範)	Deputy Director(Professor), Global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Korea University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부원장(교수)
22	SONG Hyun Seop 송현섭 (宋賢燮)	Team leader, Chuncheon iCOOP Consumer's Cooperative 춘천 아이쿱생협 팀장
23	SHIN Sangjin 신상진 (申相珍)	Director, Career Mentors 커리어멘토스 이사
24	SHIN Jungjae 신정재 (申政宰)	Art Director, SIA New York
25	AOYAGI Junichi 아오야기 준이치 (青柳純一)	CEO, Korea Bunko 공동대표, Korea文庫
26	EOH Hyoung Jong 어형중 (魚衡鍾)	Teacher, Kangwon Middle School 강원중학교 교사
27	WON Yung Tae 원영태 (元永泰)	Lecturer, Ewha Womans University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28	YOO Kyung Min 유경민 (兪炅敏)	Teacher, Seoul High School 서울고등학교 교사
29	LEW Nani 유난이 (柳蘭伊)	Senior Researcher, Leeum Samsung Museum of Art 삼성미술관 리움 수석연구원
30	YUN Gun-Gi 윤건기 (尹建基)	CEO, Medi-story Corp. (주)미디스토리 대표이사
31	Lee Min-Ho 이민호 (李民皓)	Seoul Branch Manager, Onekorea News 통일일보 한국지사 지사장
32	LEE Sang Hyun 이상현 (李桑鉉)	Editor in Chief, Gwangjuin 인터넷신문광주IN 편집장
33	LEE Won Deog 이원덕 (李元德)	Professor, Kookmin University 국민대학교 교수
34	LEE Won Jae 이원재 (李沅宰)	Former Researcher, Korea Micro Business Institute (사)소상공인연구원 前연구원
35	LEE In-Ae 이인애 (李仁愛)	Lecturer, Seoul Arts High School 서울예술고등학교 강사

연번	이름	직책 및 소속
36	Lee Jeong-Hyun 이정현 (李廷炫)	CEO, Media Line Entertainment Co., Ltd. (주)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37	LEE Chiwon 이지원 (李志遠)	Professor, Hallym University 한림대학교 교수
38	LEE Haksoo 이학수 (李學洙)	Teacher, Sungsu's Girls High School 성수여자고등학교 교사
39	IM Ho Soung 임호성 (林虎聲)	Teacher, Seohwa Elementary School 강원도 인제군 서화초등학교 교사
40	JEON Woojin 전우진 (田宇鎭)	CEO, DONG WON ROLL Co.,Ltd (주)동원롤 대표이사
41	JUNG Kyong Hee 정경희 (鄭京姬)	Deputy Director, Japan, Europe and Americas Division, Global Investment & Trade Bureau, Gangwon Province 강원도청 일본구미주통상과 사무관
42	JIN Pilsu 진필수 (陳泌秀)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연구교수
43	CHA Kevin 차경환 (車慶煥)	CEO, Sung Hyun Meditech (주)성현메디텍 대표이사
44	CHOI Sunae 최선애 (崔善愛)	Pianist 피아니스트
45	CHOI Jae Young 최재영 (崔宰榮)	Director, Gangbuk 21st Century Hospital 강북21세기병원 원장
46	HA Tae Jeong 하태정 (河泰正)	Leade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단장
47	HAN Intaek 한인택 (韓仁澤)	Research Fellow, Jeju Peace Institute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48	HAN Jae-Meen 한재민 (韓載珉)	Deputy Director, Santa Hong Clinic 산타홍의원 부원장
49	HEO Soyoung 허소영 (許素寧)	Adjunct Faculty,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Hallym University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강사
50	FUJIMOTO Shinsuke 후지모토 신스케 (藤本信介)	Movie Assistant Director 조감독

2. 일본참가자

(아이우에오 순)

연번	이름	직책 및 소속
1	AKIBA Takeshi 아키바 다케시 (秋葉武)	Professor, Ritsumeikan University 리쓰메이칸대학 교수
2	ASANO Toyomi 아사노 도요미 (浅野豊美)	Professor, Waseda University 와세다대학 교수
3	ASAMI Ayako 아사미 아야코 (浅見綾子)	PR/Sales Department, HANA Press Inc. 주식회사 HANA 홍보/영업
4	ARIMITSU Ken 아리미쓰 켄 (有光健)	Co-ordinator, Network for Redress of WW II Victims by Japan 전후 보상 네트워크 봉사자 대표
5	ANZAKO Yuka 안자코 유카 (庵達由香)	Professor, Ritsumeikan University 리쓰메이칸대학 교수
6	LEE Jongwon 이종원 (李鍾元)	Professor, Waseda University 와세다대학 교수
7	ISOZAKI Noriyo 이소자키 노리요 (磯崎典世)	Professor, Gakushuin University 가쿠슈인대학 교수
8	INOUE Toshihiro 이노우에 도시히로 (井上年弘)	Japan Congress Against A-and H-Bombs (GENSUIKIN) 원자력 · 수소폭탄 금지 일본국민회의
9	INOUE Hinako 이노우에 히나코 (井上陽南子)	Fukuoka-Busan Future Forum by College Students 후쿠오카 부산대학생 미래포럼 실행위원
10	IMAMURA Kosuke 이마무라 코스케 (今村公亮)	Secretary, Meeting of Ainoshima History 아이노시마 역사모임(相島歴史の会) 사무국장
11	LEE Myungchul 이명철 (李明哲)	Staff, United Organization of Korean Youth in Japan 재일코리안 청년연합 사무국원
12	OKADA Hitoshi 오카다 히토시 (岡田仁)	General Secretary, Tomisaka Christian Center 도미사카 기독교센터 총주사
13	OKAMOTO Aya 오카모토 아야 (岡本彩)	Technical Support Staff, Research Center for Korean Studies, Kyushu University 규슈대학 한국연구센터 테크니컬 스태프

연번	이름	직책 및 소속
14	OH Kwanghyun 오광현 (吳光現)	General Secretary, NPO Anglican ikuno community center 성공회 이쿠노센터 총주사
15	ODAGIRI Masatake 오다기리 마사타케 (小田切督剛)	Secretariat, Kawasaki-Bucheon Citizens' Exchange Council 가와사키-부천 시민교류회 사무국원
16	KASHIMA Ken 가시마 켄 (鹿島健)	Organizer, PIXA PIXA 대표
17	KATSUMURA Makoto 가쓰무라 마코토 (勝村誠)	Professor, Ritsumeikan University 리쓰메이칸대학 교수
18	KAWASE Shunji 가와세 쉐지 (川瀬俊治)	Journalist 저널리스트
19	KIMIYA Tadashi 기미야 다다시 (木宮正史)	Director,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The Graduate School of Arts and Sciences, The University of Tokyo 도쿄대학 한국학연구센터 센터장
20	KIM Bungang 김봉앙 (金朋央)	Chief of Tokyo office, Korea NGO Center (specified non-profit corporation) 코리아NGO센터 도쿄사무국장
21	KIM Mija 김미자 (金美子)	Seishun School 청춘학교 사무국
22	KUWAHATA Yuka 구와하타 유카 (桑畑優香)	Korean Culture Columnist · Translator 한류 칼럼니스트, 번역가
23	SAITO Masaki 사이토 마사키 (斎藤正樹)	Protect UTORO 우토로를 지키는 모임
24	JEONG Mihye 정미혜	Film reviewer/translator 프리랜서
25	SUZUKI Mamoru 스즈키 마모루 (鈴木守)	Employee, Shakujii no niwa, nurcing home and adult day care 그룹홈 소규모 다기능 샤크지이의 정원 회사원
26	TAKAHASHI Eiji 다카하시 에이지 (高橋栄二)	Deputy leader, Saitama Chorus 사이타마 합창단(埼玉合唱団) 부단장
27	TAHARA Ryo 다하라 료 (田原亮)	Ph.D Candidate, Waseda University 와세다대학 박사과정 대학원생

연번	이름	직책 및 소속
28	TOGASHI Ayumi 도가시 아유미 (冨桒あゆみ)	Research Assistant Professor, Research Center for Korean Studies, Kyushu University 규슈대학 한국연구센터 특임교수
29	TONOMURA Masaru 도노무라 마사루 (外村大)	Professor, The University of Tokyo 도쿄대학 교수
30	TORII Hiroyuki 도리이 히로유키 (鳥居寛之)	Associate Professor, The University of Tokyo 도쿄대학 준교수
31	NAGASAWA Yuko 나가사와 유코 (長澤裕子)	Project Assistant Professor, The University of Tokyo 도쿄대학 특임강사
32	NAMIGATA Tsuyoshi 나미가타 쓰요시 (波瀾剛)	Associate Professor, Kyushu University 규슈대학 준교수
33	NOHIRA Shinsaku 노히라 신사쿠 (野平晋作)	Peace Boat 피스보트 공동대표
34	HIDA Yuichi 히다 유이치 (飛田雄一)	Director, Kobe Student Youth Center 고베학생청년센터 관장
35	HIROSE Toshiya 히로세 도시야 (廣瀬稔也)	Representative, East Asia Information Center 동아시아 환경정보 발전소 대표이사
36	FUKAZAWA Ushio 후카자와 우시오 (深沢潮)	Novelist 소설가
37	FUKUSHIMA Shu 후쿠시마 슈 (福島周)	Staff, Support Center for Foreigner's Education & Life; Shin-ai-juku 재일외국인 교육생활 상담센터 신아이주쿠 직원
38	FUKUSHIMA Minori 후쿠시마 미노리 (福島みのり)	Associate Professor, Tokoha University 도코하대학 준교수
39	FURUKAWA Masaki 후루카와 마사키 (古川雅基)	The Meeting which Supports the Demand Realization of the Former Japan Office Civilian Employee Korean Trial 재한군인군속 재판의 요구 실현을 지원하는 모임
40	FURUYA Yukihiro 후루야 유키히로 (古屋幸宏)	Vice representative, Non Profit Organization a Society for Giving Wheel Chairs to Handicapped Children in Southeast Asia 동남아시아의 장애아동에게 휠체어를 기증하는 모임 부대표
41	MATSUDA Haruka 마쓰다 하루카 (松田春香)	Associate Professor, Otsuma Women's University 오츠마 여자대학 준교수

연번	이름	직책 및 소속
42	MARUMOTO Kenji 마루모토 켄지 (丸本健次)	Attorney-at-law, The Japan Federation of Bar Associations 일본 변호사 연합회 변호사
43	TAKEI Hajime 다케이 하지메 (武井一)	A part-time lecturer, Hibiya High School 도립 히비야고등학교 시간강사
44	MUTO Yu 무토 유 (武藤優)	Ph.D. Student, Graduate School of Social and Cultural Studies 규슈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대학원생
45	YANO Hideki 야노 히데키 (矢野秀喜)	Secretary general, Japan - Korea Joint Action Network for Legislation of forced labor Compensation 조선인 강제노동 피해자 보상입법을 목표하는 한일공동행동 사무국장
46	YAMAGUCHI Yuka 야마구치 유카 (山口祐香)	Secretariat, Kyushu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grated Science for Global Society, Fukuoka-Busan Future Forum 후쿠오카 부산대학생 미래포럼 실행위원
47	YAMADA Takao 야마다 다카오 (山田貴夫)	Secretary, Kawasaki-Bucheon Citizen's Exchange Council 가와사키 · 부천시민교류회 사무국장
48	YAMATO Yumiko 야마토 유미코 (大和裕美子)	Lecturer, Kushu Kyoritsu University 규슈공립대학 강사
49	YOSHIDA Wataru 요시다 와타루 (吉田渉)	Director, Regional Resources Research Institute 지역자원연구소 상무이사
50	WATANABE Yoshie 와타나베 요시에 (渡辺祥恵)	Chief Marketing Planner, NBC Universal Entertainment Japan LLC NBC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 재팬 PR프로듀서

3. 분과별 토론참가자

[분과토론 1 : 인적교류 및 문화체험]

사회자	이종원 (李鍾元) 와세다대학 교수	
발제자	남기정 (南基正) 서울대학교일본연구소 교수	야마다 다카오 (山田貴夫) 가와사키·부천시민교류회 사무국장
한국 패널		일본 패널
권순석 (權純奭) 문화컨설팅 바라 대표		아사미 아야코 (淺見綾子) 주식회사 HANA 홍보/영업
서동주 (徐東周)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이마무라 코스케 (今村公亮) 아이노시마 역사모임 (相島歴史の会) 사무국장
서정완 (徐禎完)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소장		가시마 켄 (鹿島健) PIXA 대표
신정재 (申政宰) Art Director, SIA New York		가쓰무라 마코토 (勝村誠) 리쓰메이칸대학 교수
어형중 (魚衡鍾) 강원중학교 교사		구와하타 유카 (桑畑優香) 한류 칼럼니스트, 번역가
원영태 (元永泰)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다카하시 에이지 (高橋栄二) 사이타마 합창단(埼玉合唱団) 부단장
유난이 (柳蘭伊) 삼성미술관 리움 수석연구원		다케이 하지메 (武井一) 도립 히비야고등학교 시간강사
윤건기 (尹建基) (주)미디스토리 대표이사		나미가타 쓰요시 (波瀾剛) 규슈대학 준교수
이정현 (李廷炫) (주)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후쿠시마 미노리 (福島みのり) 도쿄하대학 준교수
최선애 (崔善愛) 피아니스트		야마구치 유카 (山口祐香) 후쿠오카 부산대학생 미래포럼 실행위원
후지모토 신스케 (藤本信介) 조감독		야마토 유미코 (大和裕美子) 규슈공립대학 강사
		와타나베 요시에 (渡辺祥恵) NBC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 재팬 PR프로듀서

[분과토론 2 : 과학기술]

사회자	박철희 (朴喆熙)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 원장	
발제자	김영근 (金暎根)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교수	도리이 히로유키 (鳥居寛之) 도쿄대학 준교수
한국 패널		일본 패널
강희석 (姜熙錫)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아사노 도요미 (淺野豊美) 와세다대학 교수
김윤경 (金允京) 미즈호은행 서울지점 부장		이노우에 도시히로 (井上年弘) 원자력 · 수소폭탄 금지 일본국민회의
김재헌 (金哉憲) (주)브이알에듀 대표이사		이노우에 히나코 (井上陽南子) 후쿠오카 부산대학생 미래포럼 실행위원
김혜경 (金惠京) 김앤장법률사무소 실장		기미야 다다시 (木宮正史) 도쿄대학 (東京大学) 교수
노희섭 (盧熙燮) 제주도 ICT융합담당관실 담당관		정미혜 프리랜서
송완범 (宋浣範)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부원장(교수)		도가시 아유미 (富樫あゆみ) 규슈대학 한국연구센터 특임교수
송현섭 (宋賢燮) 춘천 아이쿱생협 팀장		나가사와 유코 (長澤裕子) 도쿄대학 특임강사
이원재 (李沅宰) (사)소상공인연구원 前연구원		히로세 도시야 (廣瀬稔也) 동아시아 환경정보 발전소 대표이사
임호성 (林虎聲) 강원도 인제군 서화초등학교 교사		마루모토 켄지 (丸本健次) 일본 변호사 연합회 변호사
전우진 (田宇鎭) (주)동원롤 대표이사		요시다 와타루 (吉田渉) 지역자원연구소 상무이사
차경환 (車慶煥) (주)성현메디텍 대표이사		
하태정 (河泰正)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단장		

[분과토론 3 : 인구문제 및 사회복지협력]

사회자	안자코 유카 (庵途由香) 리쓰메이칸대학 교수	
발제자	진필수 (陳泌秀)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연구교수	후루야 유키히로 (古屋幸宏) 동남아시아의 장애아동에게 휠체어를 기증하는 모임 부대표
한국 패널		일본 패널
김진선 (金進宣) Manager, VITE Design Group Inc.		오카다 히토시 (岡田仁) 도미사카 기독교센터 총주사
박미숙 (朴美淑)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지원단 팀장		오카모토 아야 (岡本彩) 규슈대학 한국연구센터 테크니컬 스태프
박홍석 (朴洪奭) 디자인마인 대표		오광현 (吳光現) 성공회 이쿠노센터 총주사
배경민 (裴敬珉) (사)복지국가소사이터티 연구원		김미자 (金美子) 청춘학교 사무국
백경학 (白庚學) 푸르메재단 상임이사		사이토 마사키 (齋藤正樹) 우토로를 지키는 모임
신상진 (申相珍) 커리어멘토스 이사		스즈키 마모루 (鈴木守) 그룹홈 소규모 다기능 샹쿠지이의 정원 회사원
이지원 (李志遠) 한림대학교 교수		다하라 료 (田原亮) 와세다대학 박사과정 대학원생
최재영 (崔宰榮) 강북21세기병원 원장		후카자와 우시오 (深沢潮) 소설가
한재민 (韓載珉) 산타홍의원 부원장		마쓰다 하루카 (松田春香) 오츠마여자대학 준교수
허소영 (許素寧)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강사		

[분과토론 4 : 풀뿌리 협력]

사회자	서승원 (徐承元)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원장	
발제자	박명희 (朴明姬)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	이소자키노리요 (磯崎典世) 가쿠슈인대학 교수
한국 패널		일본 패널
권용래 (權容來) 권용래 조형연구소 소장		아키바 다케시 (秋葉武) 리쓰메이칸대학 교수
남지원 (南智媛) 유성중학교 교사		아리미쓰 켄 (有光健) 전후 보상 네트워크 봉사자 대표
아오야기 준이치 (靑柳純一) Korea 文庫 공동대표		이명철 (李明哲) 재일코리안 청년연합 사무국원
유경민 (兪景敏) 서울고등학교 교사		오다기리 마사타케 (小田切督剛) 가와사키·부천 시민교류회 사무국원
이민호 (李民皓) 통일일보 한국지사 지사장		가와세 순지 (川瀬俊治) 저널리스트
이상현 (李桑鉉) 인터넷신문광주IN 편집장		김봉앙 (金朋央) 코리아NGO센터 도쿄사무국장
이원덕 (李元德) 국민대학교 교수		도노무라 마사루 (外村大) 도쿄대학 교수
이인애 (李仁愛) 서울예술고등학교 강사		노히라 신사쿠 (野平晋作) 피스보드 공동대표
이학수 (李學洙) 성수여자고등학교 교사		히타 유이치 (飛田雄一) 고베학생청년센터 관장
정경희 (鄭京姬) 강원도청 일본구미주통상과 사무관		후쿠시마 슈 (福島周) 재일외국인 교육생활 상담센터 신아이주쿠 직원
한인택 (韓仁澤)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후루카와 마사키 (古川雅基) 재한군인군속 재판의 요구 실현을 지원하는 모임
		무토 유 (武藤優) 규슈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대학원생
		야노 히데키 (矢野秀喜) 조선인 강제노동 피해자 보상입법을 목표하는 한일공동행동 사무국장

4. 한국 사회자 및 발제자 소개

(가나다순)

김영근 金暎根 KIM Young Geun

고려대학교 교수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교수 겸 사회재난안전연구센터장. 도쿄대학 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에서 박사학위(국제관계학 전공)를 취득 후, 미국 예일대학 국제지역연구센터(YCIAS) 파견연구원, 일본 아오야마가쿠인대학 국제정치경제학부 협력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센터 연구위원, 무역투자연구원(ITI) 무역정책실 연구실장, 계명대학교 국제대학 일본학과 조교수 역임.

주요 연구 관심분야는 글로벌 위기관리 및 재해안전학, 일본의 정치경제, 동아시아 국제관계, 국제기구(WTO), 외교·통상 등. 주요 연구업적으로는 논문 “재해후의 일본경제정책 변용: 간토·전후·한신·동일본대지진의 비교분석” (『일어일문학 연구』, 2013) 외 저서로 『일본 재해학과 지방부흥』 (공편), 『한일관계사 1965-2015. II: 경제』 (공저), 『동일본 대지진과 일본의 진로』 (공저) 및 역서 『일본 자민당의 정치경제학』, 『일본 대재해의 교훈』, 『일본 원자력 정책의 실패』, 『열광선언』, 『한일 경제협력자금 100억 달러의 비밀』 (공역), 『제언 동일본대지진』 (공역), 『재난에서 살아남기 2』 (공역) 등.

남기정 南基正 NAM Kijeong

서울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도쿄대학 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 박사(2000).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전임연구원, 일본 도호쿠대학 법학연구과 교수,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등을 거쳐 2009년부터 현직에서 근무 중.

전후 일본의 정치와 외교를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문맥에서 분석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며, 최근에는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와 평화운동에도 관심을 갖고 연구를 수행 중. 최근의 연구업적으로는 『일본정치의 구조변동과 보수화』 (편저, 2017), 『기지국가의 탄생: 일본이 치른 한국전쟁』 (2016), 『전후 일본의 생활평화주의』 (편저, 2014), 『김대중과 한일관계』 (공저, 2012), 『한일관계에서 역사 문제와 안보의 연동 메커니즘: 투트랙 접근의 조건과 과제』 (2017), 『자위대에서 군대로?: ‘자주방위의 꿈’과 ‘미일동맹의 현실’의 변증법』 (2016), 『일본의 베트남전쟁: ‘기지국가’의 ‘평화운동’과 ‘평화외교’』 (2015), 『한일국교정상화 50년: 갈등과 협력은 어떻게 진화하는가?』 (2015) 등.

박명희 朴明姬 PARK Myung Hee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로 근무.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1996), 동 대학원 석사(1999), 박사(2011) 학위를 취득. 일본 게이오대학(慶應義塾大学) 방문연구원, 한국의 국제개발NGO인 (사) 지구촌나눔운동에서 근무(1999-2005), 한일시민사회포럼의 개최실무를 담당(2002-2005).

주요 연구 관심분야는 일본정치, 시민사회, 복지정치. 주요논문으로는 “The Gap Enlargement Mechanism between Korean-Japanese Perceptions: Focusing on the Comfort Women Agreement (2015. 12.28.)”(Korea Observer, 2017), “지역정치가의 대중적지지 확보를 위한 외교적 실험: 하시모토 도루의

외교이념변화를 중심으로”(『일본연구논총』, 2015), “일본의 고령자 의료제도 개혁과 비난회피의 복지정치”(『담론201』, 2014), “일본 사회의 내셔널리즘과 트랜스내셔널리즘의 기회구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국제관계연구』, 2014), “일본 민주당의 정책체계: 생활자 중심 정치로의 시도와 좌절”(『일본연구논총』, 2013) 등.

박철희 朴喆熙 PARK Cheol Hee

서울대학교 교수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2004년부터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동 대학원 정치학석사. 1998년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 학위취득 (현대 일본정치 전공). 일본 국립 정책연구대학원대학 조교수, 외교안보연구원 조교수 역임. 컬럼비아대학, 게이오대, 고베대 객원교수 역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대 일본연구소장. 2017년 현대일본학회 회장. 세계국제대학원장 협의회 집행위원. 외교부 자체평가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국방부 서울안보대화 자문위원, 한일의원연맹 자문위원, 경기도지사 글로벌위원회 자문위원. 서울국제포럼 멤버. 한일포럼 대표간사. 세종재단, 아산정책연구원, 동아시아재단, 경기도 평생교육원 등 국내 주요 싱크탱크 이사. Seoul Journal of Japanese Studies 발행인 및 편집인, Global Asia 지역편집인. 2014-2016 조선일보 <글로벌 포커스> 칼럼니스트.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일본 동경신문 <시대를 읽는다> 칼럼니스트. 문화일보 및 동아일보 칼럼니스트 역임.

국내 언론에는 물론,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마이니치신문, NHK, CCTV, BBC 등에 한일관계에 대한 논평 및 인터뷰 다수 게재.

서승원 徐承元 SUH Seung-Won

고려대학교 교수

고려대 일어일문학과 교수 겸 글로벌일본연구원 원장. <아세아연구> 편집위원장. 고려대 일어일문학과 졸업.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정치학 석사. 2000년 게이오대 법학박사(정치학전공).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조교수, 일본 간토가쿠인대 법학부 교수, 미국 Duke대 방문학자 등 역임.

전공분야는 일본정치·외교, 동아시아 국제관계. 최근의 연구 주제는 한·중·일 3국의 지정학적 상상력 비교 연구 등. 저서로는 『일본의 경제외교와 중국』 (게이오대 출판회, 2004)[2005년도 오히라 마사요시 기념상], 『북풍과 태양: 일본의 경제외교와 중국, 1945-2005』 (고려대출판부, 2012)[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일본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 (삼성경제연구소, 2013)[중국어판: 『日本复兴大战略: 与日本高层战略家的深层对话』 (中国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7)] 등.

이원덕 李元德 LEE Won Deog

국민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동 대학원 석사 취득 후 일본 도쿄대학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 취득. 세종 연구소 연구위원을 거쳐 국민대학교 국제학부에 부임(1998). 현재까지 국민대학에서 재직 중. 2006년부터 국민 대학 일본학연구소장, 미 피츠버그대학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도쿄대학 객원교수, 현대일본학회 회장 (2015), 외교부, 동북아역사재단, 민주평통 등 자문위원 역임.

주요 연구 관심 분야는 일본정치외교 및 한일관계. 연구 업적으로는 “한일관계와 역사마찰: 김영삼 정권의 대일 역사외교를 중심으로”(『일본연구논총』, 2014), “3.11 대재난 이후 일본정치 리더십”(『의정연구』, 2011), “한일기본조약과 북한 문제: 유일합법성 조항과 그 현재적 함의”(『국정치외교사논집』, 2010) 등.

진필수 陳泌秀 JIN Pilsu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연구교수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연구교수로 근무. 일본문화, 특히 오키나와 문화 연구를 장기간 수행.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위 취득. 2010년 말부터 현직에 있으며, 오사카 센리뉴타운을 필드로 일본의 고령화 문제에 관해 연구 중.

주요 연구 분야는 고독사와 무연사회로 표현되는 사회문제 속에서의 현대 일본의 가족관계, 지역조직, 지자체의 고령화대책 등. 한국 인구감소대책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관심 분야를 한국의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로 확장 중. 문화인류학 전공자로서 오키나와, 오사카부 센리뉴타운, 나가사키현 대마도, 야마구치현 이와쿠니시, 도쿠시마현 히가시미요시정 등 일본의 여러 지방사회 현지조사를 수행.

주요 논문으로는 박사학위 논문인 “미군기지와 오키나와 촌락공동체: 지속과 재편”(2009) 외 “일본 신도시의 고령화 문제와 이에(家)제도의 해체 양상—오사카 센리(千里)뉴타운의 사례—”(『비교민속학』, 2013), “고령사회에 대응한 일본 지자체 행정의 새로운 양상과 한계: 오사카 스이타시의 사례”(『민주주의와 인권』, 2016) 등.

5. 일본 사회자 및 발제자 소개

(아이우에오 순)

안자코 유카 庵達由香 ANZAKO Yuka

리쓰메이칸대학 교수

리쓰메이칸대학 문학부 교수. 「조선인 강제동원 진상규명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전문 연구 분야는 한국근현대사, 한일관계사. 특히 주된 관심 분야는 조선총동원체제 및 전쟁동원에 의한 조선사회의 변용. 주요 연구 업적으로는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코리아연구』 제8호, 2017), 『도록 식민지조선에 살다』(공저, 岩波書店, 2012), 논문 『조선에서의 총동원 체제의 구조』(岩波書店, 2011) 등.

이소자키 노리요 磯崎典世 ISOZAKI Noriyo

가쿠슈인대학 교수

도쿄대 교양학부 졸업(1987), 동 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 석사(1990), 동 대학원 박사과정 진학 후 1991년부터 약 2년간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 유학. 1994년에 도쿄대 대학원을 중퇴 후 도쿄대 조수(助手)를 거쳐 1998년 가쿠슈인 대학 법학부 조교수 역임 후 교수가 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 2004년부터 2년간 UC Berkeley, Center for Korean Studies 객원연구원으로서 미국에서 활동.

연구 분야는 현대한국정치연구, 비교정치연구로서의 한국의 국가-사회관계이며, 최근에는 한일관계로 분야를 확장 중. 최근 주요 연구 업적으로는 『전후한일관계사』(공저, 有斐閣, 2017), 『시리즈 일본의 안전보장 6 조선반도와 동아시아』(공저, 岩波書店, 2015), “인터넷 사회의 선거와 민주주의—한국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세대 대립을 축으로”(『지역연구』 15-1, 2015), “글로벌화 시대의 성장과 복지를 둘러싼 한국정치”(『동양문화연구』 17, 2015) 등.

도리이 히로유키 鳥居寛之 TORII Hiroyuki

도쿄대학 준교수

1970년 출생. 도쿄대학 대학원 이학계 연구과에서 박사 취득. 제네바 CERN 연구소에서 장기간 실험연구를 수행 후 도쿄대 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 조수, 조교 등을 역임, 이학계 연구과 준교수로 임용됨. 전문 연구 분야는 소립자원자물리학, 방사선과학.

2001년 동일본 대지진 및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를 목격하고 충격을 받아 과학자·교육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대학생들을 위한 방사선 강의를 시작. 고교생 및 일반시민, 그 외에 고등학교 교사나 재판관 등은 물론, 후쿠시마 현의 주민들을 위하여 다수의 강연을 진행함. 『방사선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기』(2012)를 출간하였으며, 후쿠시마 현에서는 피난구역 및 사고 원전 등을 방문.

분야의 장벽을 넘어 생명·의학·정보·사회과학분야의 연구자들과 교류하며 원전 사고 후 방사선을 둘러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나 과학자의 정보발신과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 중. 또한 타 대학에서 「에너지 과학」 등을 강의하며 재생가능에너지 및 지구온난화 등도 다루어 에너지 문제나 환경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음. 다양한 분야 간 교류와 문화, 특히 외국어에 관심과 조예가 깊어 현재까지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라틴어, 한국어, 중국어 등을 배움. 한국어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독학 중이나 그다지 잘하지 못하는 것이 유감.

후루야 유키히로 古屋幸宏 FURUYA Yukihiro

NPO법인 동아시아의 장애아동들에게 휠체어를 보내는 모임

1947년 야마나시 현 출생. 1971년 고마자와대학 문학부 사회과학과 졸업. 전공은 사회복지. 동년 4월 도쿄도 민생국(현 복지보건국)의 복지직에 취직. 주로 복지시설의 장애인 자립 생활을 위한 생활지원, 취업지원, 소셜워크 업무를 담당. 2013년 3월 퇴직.

2012년 6월부터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 그룹(けやきの杜)」 및 사회복지법인 「엘레지 모임(かたくりの会)」의 이사(무급) 겸무. 2014년 7월 NPO법인 「동남아시아의 장애아동들에게 휠체어를 보내는 모임」을 동료들과 함께 설립하고 부대표로 취임. 그 이후 아동용 휠체어를 필요로 하는 동남아시아의 장애아동들에게 휠체어를 보내는 활동을 한일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수행 중.

야마다 다카오 山田貴夫 YAMADA Takao

가와사키·부천 시민교류회 사무국장

헤이트 스피치 근절을 위한 가와사키 시민 네트워크 사무국

1949년 출생. 대학생이었던 1970년에 히타치제작소로부터 단지 국적만을 이유로 취업차별을 당한 재일한인 2세의 재판을 지원하는 활동에 참여, 4년 후 승소 판결을 얻어 냄. 재판을 지원하던 중 재일한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가와사키시의 재일대한기독교 가와사키교회의 신도와 만나게 된 것을 계기로 가와사키시로 이주하여 가와사키시청에 취직. 외국인등록사무나 인권공생추진, 사회교육 등을 담당. 가와사키 지역내의 재일한인과 함께 민족차별 철폐 운동에 참여하여 재판 지원에 가담했던 전국 각지의 사람들과 함께 「민족차별과 투쟁하는 연합협의회(전국민투련)」를 결성. 현재는 「이주민과 연대하는 전국 네트워크(이주련)」의 출입국관리법 대책부회나 「헤이트 스피치 근절을 위한 가와사키 시민 네트워크」에서도 활동 중.

1991년에는 당시 도쿄대 유학 중인 현 가톨릭대학 이시재 명예교수와 만남을 계기로 가톨릭대학 소재지인 경기도 부천시와 시민교류를 시작하고, 1996년에 두 도시 간 우호도시 체결을 조인. 가와사키와 부천의 교류는 「재일한인이 뿌리를, 행정이 줄기를, 시민이 잎을 자라게 하는」 교류라는 평가를 받은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한국과 일본, 재일한인이라는 3자 간의 교류를 지속하고 있음. 2003년에는 두 도시의 시민교류회를 설립하고 외국인정책, 사회교육, 환경문제 등 지자체 정책과 관련한 영역과 그 외 초등학생 미술교류, 고등학생 교류, 직원 교환파견 제도, 스포츠나 음악 등 폭넓은 분야에서 시민들의 주체적 교류를 진행하고 있음. 나아가 국가 간의 역사인식 등 정치적인 대립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역사교과서 문제, 위안부 문제 등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루며 시민 교류를 지속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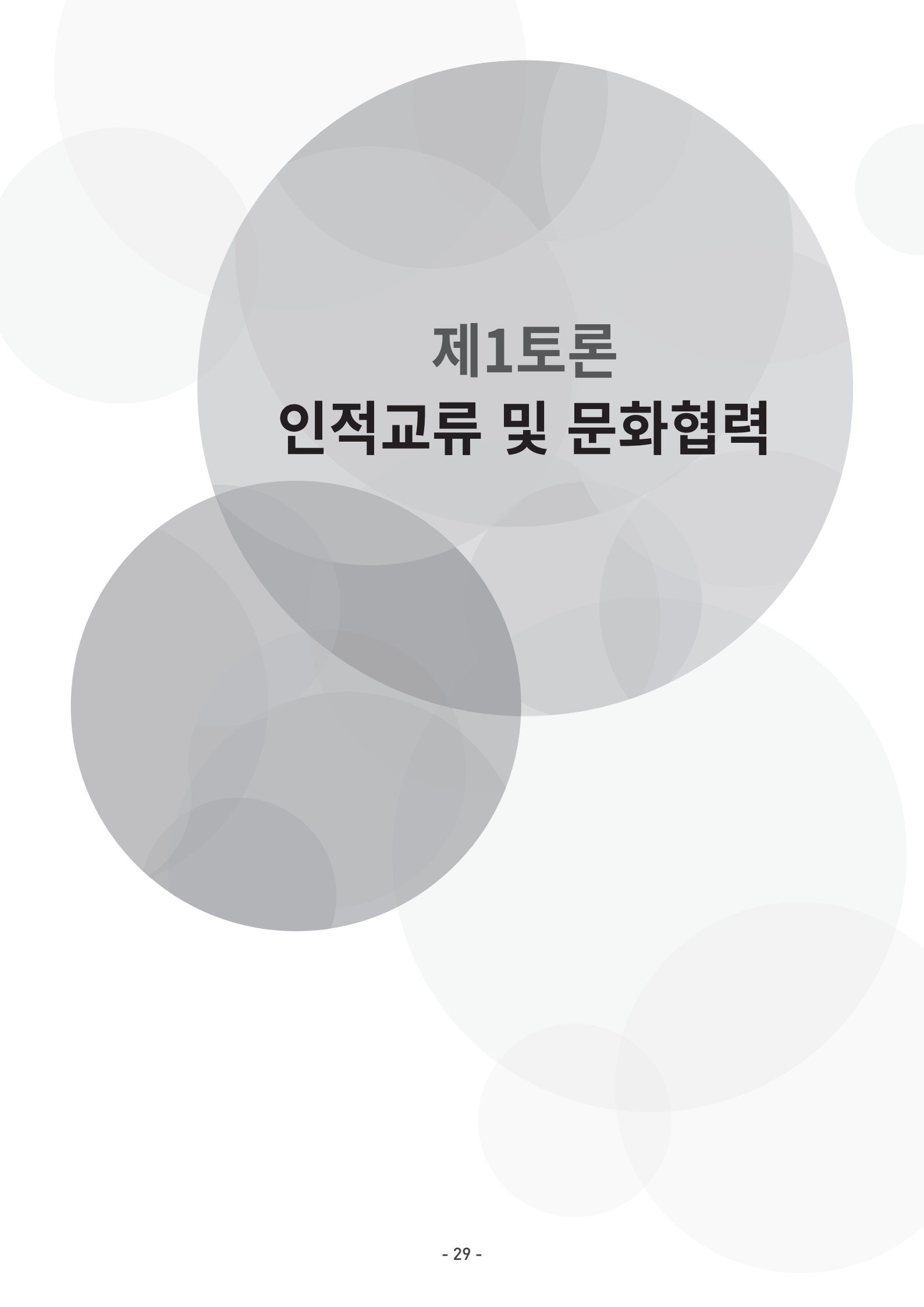
이종원 李鍾元 LEE Jong-won

와세다대학 교수

1953년 한국 출생. 와세다대학 대학원 아시아 태평양연구과 교수. 국립 서울대학교 중퇴 후 82년도에 도일(渡日). 국제기독교대학 졸업 후 도쿄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석사과정 수료. 법학박사(국제정치학 전공) 취득. 도호쿠대학 법학부 조교수, 릿쿄대학 법학부 교수, 동 대학 부총장을 역임 후 2012년 4월부터 현직에 재직 중. 미국 프린스턴대학 객원연구원, 한국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아사히신문 아시아네트워크 객원연구원 등을 역임.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기념상, 미국역사가협회(OAH) 외국어저작상 등을 수상. 주요 저서로는 『전후 한일관계사』(공저, 有斐閣, 2017), 『동아시아 화해의 길 -역사문제에서 지역안전보장으로』(공동편저, 岩波書店, 2016), 『역사로서의 한일국교정상화』(공동편저, 호세이대학출판부, 2011), 『국제정치에서 생각하는 동아시아 공동체』(공저, ミネルヴァ書房, 2012), 『동아시아 냉전과 한미일관계』(도쿄대학출판회, 1996) 등

V. 발제문



제1토론

인적교류 및 문화협력

한일 시민 100인 미래 대화 日韓市民100人未来対話



한일 인적교류와 문화협력: 현황과 전망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한일 인적교류와 문화협력: 현황과 전망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1. 한일관계의 현재

- 한일관계의 복잡한 전개과정의 결과, 현 단계 한일관계는 ‘갈등’과 ‘협력’이 여러 분야와 여러 수준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갈등과 협력의 다각적 다층적 복합구조’를 갖게 됨.
- 한일관계 갈등의 기원은 ‘반공연대’ 구축이라는 안보협력을 위해 ‘식민지 유제’ 청산이라는 역사화해 노력을 봉인한 데에 비롯.
- 그러나 고노담화(1993), 무라야마담화(1995), 한일 신평트너십 선언(1998), 간담화(2000) 등을 거치면서 역사화해 노력을 기울여옴. 반면 냉전의 종식으로 안보협력의 동인이 약해지면서 한일관계가 이완되어 구조변동기에 들어감.
- 경제협력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숙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으며, 비영리 시민단체 간 교류, 학술교류, 지방자치체 교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매우 긴밀한 양국관계를 유지.

2. 한일 양국 국민의 상호 인식

가. 일본 국민의 한국 인식

-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친근감에 대한 내각부 여론조사에서 2014년 10월,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가 66.4%, ‘느낀다’가 31.5%로 여론조사 실시 이래 최악의 상황이었음. 2016년 1월 조사에서 각각 64.7%, 33%로 회복세를 보였고, 이번(2016년 10-11월) 조사에서는 38.1%, 59.1%로 회복세가 뚜렷해짐.
- 한편 동아시아연구원과 일본 언론 NPO가 공동으로 2017년 6월부터 7월에 실시한 조사에서 일본 국민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다소 악화됨. (23.1%→29.1%→26.9%) 일본 국민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은 같은 시기 호전되었다가 악화(52.4%→44.6%→48.6%). 2015년 합의 이후 개선되었으나 2017년에 다시 악화. 문재인 정부 출범에 대한 일본 국민의 의구심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반면 같은 시기 한국 국민의 일본에 대한 인상은 개선.
- 한일관계에 대한 일본 측 여론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생각되는 것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는 상관없이 ‘한일관계 발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일본 국민이 70% 가까이에 이르고 있다는 점(2016년 1월 조사에서는 69.0%)이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약 4분의 1에 머물고 있다는 점(2016년 1월 조사에서는 26.5%)임.

나. 한국 국민의 일본 인식

- 한편 한국 국민의 일본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한국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일본 언론NPO’의 조사를 참조할 수 있음. 2013년에는 일본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한국 국민이 12.2%에 불과한 반면, ‘좋지 않은 인상’을 갖는 한국 국민은 76.6%에 달함.
- 이 수치는 2016년도에는 약간 개선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위의 수치는 각각 21.3%, 61.0%였음.
-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인이 생각하는 한일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조사에서도 한국 국민의 한일관계에 대한 기대가 확인된다는 점임.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일관계가 ‘나쁘다’고 인식하는 한국인이 줄고 있으며, 미래 관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한국인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한국인이 늘고 있다는 점임.

다. 상대 국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 ‘동아일보와 아사히신문의 공동여론조사(2015.6)’에 따르면, 일본인의 한국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 것들은 미디어(78%), 친구(16%), 학교 교육(15%), 직접 방문 경험(15%), 가족(10%)의 순이었음. 여기에서 미디어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음.
- 같은 조사에 따르면 미디어 중에서도 TV(68%), 신문(10%), 인터넷(9%), 영화(4%), 서적(1%), 잡지(1%) 등의 순이었다. 인터넷이나 서적, 잡지 등 혐한류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미디어보다 TV의 영향력이 압도적임을 알 수 있음.
- 또한 같은 조사에서는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들 가운데 50%의 일본인이 친근감을 갖게 된다는 결과에 주목할 필요. 결국 상호방문의 증대는 친근감을 갖는 일본인을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결론.

3. 한일관계에서 사회문화교류의 위상

가. 사회문화교류의 의의

- 한일 양국은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 1기 보고서가 지적하듯 “비서구 지역에서 정치적 민주주의와 선진 시장경제, 다원적 사회문화 제도를 성공적으로 발전, 정착시킨 대표적인 국가”임.
-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 1기 보고서는 또한 ‘동아시아 역내 공생을 위한 복합 네트워크’ 구축을 공동의 목표로 제기하고, ‘지식 문화 미디어 분야’의 한일협력

과제로 ‘동아시아 지식은행 프로젝트’의 추진, ‘한일 공동 운영의 공영방송’과 이를 위한 문화 스포츠 콘텐츠 구축 등을 제안하고 있음. 이러한 제안 들은 양국 정부의 리더십만으로는 성취되기 어려우며,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자율적 자발적 노력에 그 성패가 달려 있음.

- 나아가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 2기 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신시대 한일 협력 7대 핵심과제의 첫 번째 과제로 ‘지식 문화 미디어 분야의 교류 촉진’을, 두 번째 과제로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을 들고 있을 정도로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문화 교류’가 중요한 분야로 제시되어 있음.
- 여기에서 보듯 한일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정치적, 경제적 보편 가치에 더해 다원화된 시민사회라는 사회문화를 공유하는, 동아시아의 드문 국가들이며, 한일관계는 이러한 기초 위에서 전개되고 있음.

나. 미중 양강시대의 생존전략으로서 사회문화교류

- 그런 의미에서 민간(의 사회문화) 교류는 한일관계를 국익을 둘러싼 경쟁관계나 세력균형의 일방에서의 협력이라는 전통적인 구도를 넘어서서 보다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공생의 네트워크(신시대 복합공생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의 중심축.
- 민간의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가 한일협력 진전의 중요한 요인이며, 한일협력의 심화가 미중 양강 시대의 생존전략이라고 한다면, 한일 시민사회 사이의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야말로 미중 양강 시대의 한일 양국이 추구할 생존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

4. 사회문화 교류 현황

가. 인적 교류

- 한일 인적교류의 개관은 다음의 표를 참고함.¹⁾ [단위 : 만 명, ()는 증가율(%)]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방한 일본인	305.3 (28.4)	302.3 (△0.1)	328.9 (8.8)	351.9 (7.0)	274.8 (△21.9)	228.0 (△17.0)	183.7 (△19.4)	229.0 (24.7)
방일 한국인	158.7 (△33.4)	244.0 (53.8)	165.8 (△32.0)	204.4 (23.3)	245.6 (20.2)	275.5 (12.2)	400.2 (45.2)	509.0 (27.2)

- 일본정부관광국. 2017.2.17.일 발표. 2017년 1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약 62만 5천 400명. 같은 기간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은 15만 6천명.(방일 한국인 관광객의 1/4)
- 방한 일본인의 수는 2012년 352만 명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방

1) 「한일간 주요 교류 통계」, 『일본개황 2015』, 135쪽 ; 2009-2015년의 자료는 한국관광공사·JNTO를 참조, 2016년 자료는 『연합뉴스』 2017.2.17. 참조,

일 한국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276만 명 기록. 2014년 기준 전체 외국인 입국자 중 일본인의 비중은 중국에 이어 2위.

- 방일 한국인 수는 엔 환율 및 세계경제 상황 등에 따라 등락이 많은 편이나 1999년 이후 꾸준히 1위 유지(2014년 2위) 2006년 일본 입국 비자 면제, 엔화 환율 하락 및 항공편 확충 등으로 방일 한국인이 대폭 증가한 이후 꾸준히 200만 명 시장을 유지, 2014년에는 275만 명으로 방일 한국인 비중 역대 최고치 기록. 이는 대만에 이어 2위.
- 한일 인적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취업관광프로그램(Working Holiday Program), 한·일 중고생 교류(정부지원 한일 청소년 교류는 2015년 연간 1,120명. 누적인원 21,678명), 한일 축제 한마당(2005년-, 2015년에는 9만명의 참석을 기록), 일한 축제 한마당(2009년-), 한일 대학생 단기 연수 프로그램(JENESYS), 유럽의 에라스무스 계획을 모델로 한 CAMPUS Asia²⁾, 유럽의 에스페란토 운동을 모델로 한 동아시아 청년 에스페란토 세미나, 상대 국어 선택 고교생 교류지원 사업, 일본 이공계 국립대학에 대한 한국 유학생 파견사업³⁾, 교육·학술 교류(정부초청 장학생) 등이 있음.

나. 문화 교류

- 한국 가수의 일본 공연은 2012년 462회, 2013년 757회, 2014년 919회, 2015년 869회 등. 한국 영화의 일본 상영 편수는 2006년 54편, 2007년 41편, 2008년 55편, 2009년 23편, 2010년 38편, 2011년 34편, 2012년 43편, 2013년 46편, 2014년 64편, 2015년 43편.
- 일본 영화의 한국 개봉도 매우 활발. 2015년에는 381편이 개봉. 한국에서 개봉된 영화(1,176편)의 30%에 해당. 다만 매출액 점유율은 1.8%. 흥행과 무관한 영화 개봉.
- 한류 드라마의 일본 상영은 지상파에서의 '퇴출?'과 위성방송의 한계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반면 한국 드라마의 일본판 리메이크가 주목. 반면 일본 드라마의 한국 상영은 케이블(채널)을 통해 시간차 없이 방영. 일본 드라마의 한국판 리메이크도 꾸준히 활발.
- 한류로 대표되는 한일 문화 교류는 양적으로는 현상 유지, 또는 약간의 증대를 보임. 정부 주도의 문화예술 교류에 더해 민간주도 문화예술 교류사업도 꾸준히 전개됨.

2) 2010년 하토야마 총리 제안으로 2011년부터 시작된 한중일 대학 교류 프로그램, EU의 에라스무스 계획이 모델임. 독불 우호조약(엘리제조약 1963)의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50년간에 800만의 실적

3) 1998년 한일공동선언으로 시작, 20년만인 2018년 종료 예정

다. 지자체 교류를 통한 인적교류

- 1968년 10월 울산시와 일본 야마구치현 하기시 간 최초 자매결연 체결. 이후 1988년 서울올림픽 및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일본 내 한류 붐 등을 계기로 양국 지자체 간 자매결연 체결 확대.
- 2014년 현재, 서울시-도쿄도 등 양국 간 총 195개 지자체 간 자매 및 우호결연 체결.(2016년 1월 현재, 한일간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은 160개, CLAIR 발표 자료)
- JET(The Japan Exchange & Teaching) 프로그램은 일본이 외국인 청년을 초청, 자국의 자치단체에 국제교류원 등으로 배치하여 근무시키는 제도.

5. 한일 사회문화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5대 액션 플랜

가. ‘한일 시티즌 파트너십 선언’ 및 ‘한일 시민 새로운 역사 선언’의 채택

- 2018년은 1998년으로부터 20년 되는 해, 2019년은 1919년으로부터 100년 되는 해. 이를 염두에 두고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가 미래달력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과 실시를 통해 새로운 한일관계로의 도약을 이루는 계기로 삼을 필요.
- 2018년은 1998년에서 시작된 다양한 민간교류의 실적 및 성과를 정리하고, 두 차례의 신시대 공동연구에서 제기된 과제들을 실행에 옮기는 해로 삼을 것. 2019년은 역사적 과제를 둘러싼 시민교류의 성과들과 역사공동연구회의 연구를 기반으로 1910년 한국병합조약의 강제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도출하고, 1965년의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로 삼을 것.

나. ‘한중일 올림픽 교류 프로그램’의 실시

- 2018년 평창올림픽, 2020 도쿄올림픽, 2022년 베이징올림픽 등 동북아에서 잇달아 열리는 세 개의 올림픽을 연계하여, ‘동아시아 올림픽 기간(NEAOS, Northeast Asian Olympic Series)’을 선포하고, 스포츠 문화 관광 관련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
- 평창올림픽에 북한의 참가를 적극 유도하여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한과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스포츠 문화 교류의 협력체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

다. '미래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는 한일 시민 위원회' 설립

- '미래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는 한일 시민 위원회'를 설치.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한 공동 대응 체제 수립과 실시. 에너지 환경 부분에서의 시민사회 협력을 추진. 예컨대, 슈퍼그리드, 스마트그리드 협력, 원자력협력을 위한 한일 시민대화의 개최.
- 기타, '한일 시민 100명 미래 대화'의 지속적 개최, '3/1에서 3/11로, 동아시아 시민 평화기행', '환동해 청춘 18 철도-항로 연계 티켓', '한국판 GENESYS(단기 방문 연수)', '노년인구 교류 프로그램', '인구 과소 지역 초중등학교 교환 유학제도', '한일 교환 유학생 10만명 양성', '일본 공대 학부 유학생 제도' 연장, '상호 취업 TO제' 등 한일 청소년-시민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 실시.

라. '한일 공동출자 연구소(씽크탱크)/대학원대학/방송국'의 설립

- 한일 간에 공동출자 방식의 동아시아방송국을 설립하여 한일 공동으로 공공외교를 전개하고, 지적 공공재 창출을 목표로 한일 공동출자 연구소(씽크탱크) 및 대학원 대학 설립.
- 한일 대학원대학은 한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전임교원을 두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하되, 동아시아 지역의 연구원 대학교원들을 활용하여 동아시아 현자의 대화 프로그램을 항시적으로 운영.

마. '한일 지방 시대'의 개막을 통한 한반도 휴전체제 해체

- 한일 양국의 지방자치체가 중심이 되어, 한일-중, 한일-미, 한일-러, 한일-북 등의 민간협력을 기획, 전개. 예컨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경제침체, 재정악화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창생 사업에 나선 일본 지자체(돗토리, 니가타와 같은 환동해권 지역)에서 남북-일 교류사업을 전개.
- 이는 남북화해, 한일협력, 한국 청년의 일자리 창출, 일본 지자체의 지방창생을 연계하여 이룰 수 있는 사업. 또는 개성공단을 정비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남북-일-재일한국/조선 청년들의 연구 교류의 장, 공동출자 기업 및 IT/AI/BT 사업 육성 사업 전개.



시민주체, 과제의 직시, 한·일·재일코리안의 연대와 공유: 가와사키(川崎)를 사례로

야마다 다카오

가와사키·부천 시민교류회 사무국장

한일시민 100인 미래대화 2017년 11월 10일@제주도

세션 ① 인적 교류·문화 협력

「시민주체, 과제의 직시, 일·한·재일코리안의 연대와 공유-가와사키(川崎)를 사례로」

발표자: 야마다 다카오(山田貴夫, YAMADA TAKAO)

◇가와사키·부천 시민교류회 사무국장

◇헤이트 스피치를 용인하지 않는 가와사키 시민 네트워크 사무국

2017/11/6

1

I 일본 가와사키의 지역 활동 — 역사와 특색

- 게이힌(京浜) 공업지대의 중핵으로서 전전(戰前)부터 재일 조선인 다수 거주 지역, 전후(戰後)에도 부흥의 거점으로서 재일 조선인이 집주
- 1971년부터 혁신시정(도쿄 도, 가나가와 현, 요코하마 시 등)과 연계, 행정차별 철폐에 협력
- 1969년 가와사키 시 남부에 재일대한기독교 가와사키 교회가 지역활동의 일환으로서 보육원 개설
- 1970년 히타치 취직차별재판 지원~74년 승소, 민투련(民闘連) 결성으로
- 고 이인하 목사는 「한국민주화를 위한 세계협의회(후의 민주동지회)」(1975년 설립) 멤버
- 일본인 크리스트교 신자, 가와사키 시 공무원, 교직원, 연구자와의 공투, 다양한 국적 조향 철폐 운동
- 지역 활동을 통하여, 일본인과 함께, 민족적 주체의 형성을 현재는 「**누구나** 힘껏 살아갈 수 있도록」을 목표로

2017/11/6

2

I 가와사키 시와 재일조선인의 역사 가와사키 시사(市史) 및 사사(社史)에서의 기록

기업명	조선인 징용자 수 등
니혼강관(日本鋼管)	1943년 가와사키 제강소의 「훈련교」 1,902인
아지노모토(味の素)	조선인이 늘어 49명(45년 2월~8월)
이스즈 자동차	183명의 조선인 징용자
니혼야금(日本冶金)	전시 노동력 보충을 위해 집단적으로 고용
니혼주조(日本鑄造)	조선에서도 징용공이 와 기숙사에 입소
쇼와전공(昭和電工)	반도 노무자는 44년에 2회, 1회에 60명 정도
쇼와전공 알루미늄 (昭和電工アルミ)	정부는 만주, 조선, 대만으로부터 강제 징용했다. 당사에도 조선에서 채용한 상당수의 인원이 배속

2017/11/6

3

가와사키 시와 조선인 - 전전(戰前) 가와사키 시사(市史) 및 노동사, 사사(社史)에서의 기록

기업명	조선인 징용자 수 등
도쿄기계공업 토키코 (東京機器工業トキコ)	조선에서 훈련공 72명을 수용
오사카철공소(大阪鐵工 所, 히타치조선)	기숙사 1동에 30인 정도로 30동 정도 있었으므로 1000인 정도—당사자 증언
니혼유화공업 (日本油化工業)	공습 사망자 명부에 조선인 21인
가와사키 시	분뇨 퍼내는 데 반도 출신자 21인 채용
도시바(東芝)	소년공 모집은 대만, 조선까지 이름
후루카와주조(古川鑄造)	조선에서 많은 젊은이가 징용공으로서 동원되어 왔다
미쓰비시중공가와사키기 계(三菱重工川崎機器)	한국에서 약 300인을 기숙사 菱明寮에 수용

2017/11/6

4

가와사키의 할머니들의 전후사

- 「이때부터(=종전후)가 정말 큰일이었어!」
- 「전전에는 싼 임금으로 차별도 심했지만, 그래도 일거리도 노무자 합숙소(주거)도 있었어」
- 「나는 해보지 않은 일(직종)이 없어. 도둑질과 매춘 이외에는 뭐든지 했어」(스크럽(고철상), 폐품 회수, 밀조주(密造酒) 장사, 노가다, 양돈, 암시장, 빌딩 청소 등, 소규모 노점 같은 장사나 육체 노동으로 생계를 꾸렸다)
- 남편이 저소득 혹은 소득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줄곧 일해온 반생

2017/11/6

5

재일코리안 2세의 도전

- 「건국·귀국」사상으로부터 「일본에서 살아간다」
- 양태호(梁泰昊)저 『부산항에는 돌아갈 수 없다』
- 히타치 취직차별재판 1970년 제소 ⇒ 74년 승소, 75년 민투련(民鬪連) 결성
- 한국국적 사법 수습생 탄생 77년 김경득(金敬得) 씨가 제 1호
- 지문 날인 거부 투쟁 80년~99년 전면 폐지로
- 입관특례법으로 특별영주제도 91년
- 외국인 지방 참정권 소송의 최고재판소 판결 「외국인에게 부여해도 위헌이 아니다」(헌법허용설) 95년
- 가와사키 시, 일반사무직 직원 채용 시 국적조항 철폐 / 외국인 시민대표자회의 설치 96년

2017/11/6

6

지역에서 함께 살아간다 - 가와사키의 재일코리안의 활동

- 1969년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60주년 「그리스도를 따라 이 세상에」의 응답으로서 무인가 보육원 개설(보육사 3명 원아 34명)
- 1970년 5월 보육사 본명(한국명) 사용을 보육원 방침으로
- 1972년 9월 보육원아 본명(한국명) 사용을 방침으로
- 1973년 10월 사회복지법인 세이큐샤(靑丘社) 인가
- 1974년 8월 이케가미 정에서 지역 아동 모임(地域子ども会) 활동 개시
- 1975년 4월 졸업 원아의 조력으로 「사쿠라모토 학원(桜本学園)」 발족
- 1975년 4월 아이들을 지켜보는 어머니 모임 결성

2017/11/6

7

지역에서 함께 살아간다 - 재일코리안의 활동 2

- 1976년 4월 시 위탁사업 학동보육 「당나귀회(ロバの会)」, 고학년은 「민들레회(たんぽぽの会)」, 중학생 부회도 개설
- 1978년 4월 교회 신도를 대상으로 식자(識字) 학급 개설
- 1988년 후레아이칸(ふれあい館) 오픈(조례설치, 공설민영)
- 1998년 1월 재일코리안 고령자 「도라지회(トラジの会)」 설립
- 2004년 4월 외국에 뿌리를 가진 중학생 학습 서포트
- 2006년 4월 장애아 중·고등학생 타임케어 사업
- 2006년 12월 가와사키 구 다언어 통역·번역뱅크 사업
- 2014년 가와사키 고등학교 정시제 학습 지원 「ポチットカフェ」
- 2016년 지역활동지원센터 「마나(マナ)」 개설
- 「누구나 힘껏 살아갈 수 있도록」

2017/11/6

8

가와사키에서 싸운 민족차별철폐투쟁 (민간기업)

- 75년 노무행정연구소『노정시보(勞政時報)』의 채용내정단계에서의 채용 취소 지도에 항의
- 78년 가와사키신용금고 주택대출용자 거부항의운동
- 79년 도쿄도치과의사회 부속학교 입학 거부 항의
- 79년 소매금융회사 JACCS 가입거부항의운동
- 79년 가미후쿠오카 제3중학교(上福岡三中) 차별에 의한 집단괴롭힘에 자살로 항의
- 82년 제일생명 생명보험 가입거부항의운동
- 가와사키 신용농협 취직 차별

2017/11/6

9

행정차별철폐운동 - 가와사키 시의 주요 외국인 시민 정책

년	정책
1972년	모든 외국인에게 국민건강보험 적용
1975년	시영주택, 아동수당의 국적조항 철폐
1985년	이토(伊藤) 시장, 지문거부자를 고발하지 않겠다고 선언
1986년	외국인 아동 학생 교육방침 책정
1988년	가와사키 시 후레아이칸(ふれあい館) 개설
1994년	외국인 고령자·심신장애자 복지 수당 지급
1996년	시 공무원 채용 시의 국적 요건 철폐
1996년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 설치
2005년	다문화 공생사회 추진 방침 책정

2017/11/6

10

현재의 과제－헤이트 스피치와의 싸움

- 2013년 5월: 제1회 가와사키 역전 헤이트 데모
- 2015년 9월: 안보법제 반대 재일코리안 1세의 800m 데모(전쟁과 차별은 종이 한 장 차이)
- 2015년 11월: 첫 번째로 사쿠라모토(桜本)에
- 2016년 1월 헤이트 스피치를 용인하지 않는 모든 가와사키 시민집회 300인 참가
- 2016년 1월 31일 두 번째로 사쿠라모토에
- 2016년 6월 5일 나카하라 구 평화공원 앞에서 헤이트 데모 10m로 중지
- 2017년 3월 세토 히로유키(瀬戸弘幸) 일본제일당(日本第一党) 최고고문 개인 강연회 개최, 가와사키 시 허가
- 2017년 7월 일본제일당 나카하라 구에서 헤이트 데모
- 인종차별 철폐 조례 제정을 요구하며 활동중

2017/11/6

11

II 한국과의 시민 교류의 시작

- 부천시에 있는 가톨릭대학교(전 성심여자대학교)이시재 명예교수가 1974년에 도쿄대학원에 유학. 가와사키 교회의 이인하 목사, 배중도 씨 등과 교류
- 한국 민주화 운동 지원의 경험
- 1991년 1월, 이시재 성심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장 등이 일본 지방자치정책 연구로 가와사키 조사
- 조사에 가와사키 지방자치연구센터 등 가와사키 시 공무원, 시민단체, 연구자가 협력
- 사쿠라모토 상점가(桜本商店街)가 한국과의 상점가 교류를 희망, 이시재 씨는 부천시의 원미시장을 소개
- 「재일코리안이 뿌리를, 자치단체가 줄기를, 손을 잡은 시민 운동이 미래를 연다」 주문지 미에(十文字美恵)(아사히+동아일보 전후 50년 공동 기획 논문)

2017/11/6

12

자치단체 교류·시민 교류의 경과

- 가와사키 지방자치 연구센터 연수 여행 1993~2003년
- 가와사키 시민 방문단(이이즈카(飯塚) 시의원 주최) 20회
- 한국 다문화사회 연구 투어(2005~2010년)
- 미술교류(1996~2016년, 종료)
- 초등학교 미술교류(2007년~현재)
- 고등학생 교류 하나(ハナ)(1999년~연2회 상호 방문 교류)
(재일코리안, 조선인학교 학생도 참가)
- 도서관 교류(2006년~)
- 1996년 양 시가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
- 직원 상호 파견(1998년~현재)
- **과거를 바꾸지 말고 미래를 바꾸자!** 집회 3회 개최
2001·2005·2009년

2017/11/6

13

2003년 양 도시에 시민 교류회 설립

‘부천 가와사키 시민교류회’와 ‘가와사키 부천 시민교류회’와의 상호협력협정서

‘부천 가와사키 시민교류회’와 ‘가와사키 부천 시민교류회’는 1990년대 초부터 시작한 양도시간의 시민교류를 기초로 상호이해와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1996년 10월에 체결된 ‘우호도시협정서’의 정신을 시민이 주체적으로 역할을 할 것을 목적으로 양도시에 시민교류회를 설립하고 서로 협력할 것을 합의한다.

양도시 시민은 과거의 모든 역사를 직시하고, 극복과 화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함께 교류를 추진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여 왔다. 이후에도 미래를 향하여 서로 배우면서 시민문화, 예술, 체육, 지자체정책, 경제등을 통해 서로 협력 협동한다.

그리고, 이러한 양도시 시민활동의 축적은 지역과 국경을 넘어 널리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 확립에 공헌할 것을 확신한다.

2003년 10월 23일

부천 가와사키 시민교류회 가와사키 부천 시민교류회

2017/11/6

14

2011년 시민교류 20주년 기념일 한일 시민교류의 미래를 위한 선언문

- ① 양 도시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시민자치, 기본적 인권을 기초로, 차별과 배제 없는 다민족·다문화공생의 마을만들기를 추진한다.
- ② 한국·일본·재일코리언의 삼자교류를 실천해 온 ‘부천·가와사키 고등학생 포럼 하나’를 지원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초등학생, 중학생 등 차세대의 교류사업을 계획한다.
- ③ 양 도시의 우호와 발전을 위해서 시민과 행정과의 협력에 의한 만화, 문화, 예술, 산업, 환경, 평생학습 등의 정책교류를 지원한다.
- ④ 한일 간의 역사인식에 관계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교환을 하고 공통인식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⑤ 양 도시 간의 시민교류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과 일본, 나아가 중국을 시작으로 동아시아 시민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맡는다.



제2토론 과학기술 협력



원전사고를 통해 생각하는 에너지와 환경문제

도리이 히로유키
도쿄대 준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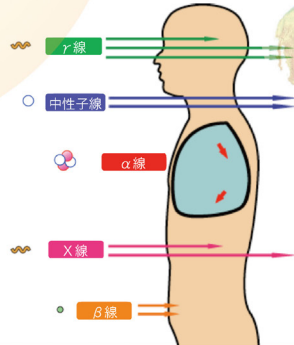
한일시민 100인 미래 대화

2017 / 11 / 10 (金)

한국 제주도 서귀포시
휘닉스 아일랜드

분과 세션 2: 과학기술협력

에너지, 안전, 환경, IT, 제 4차 산업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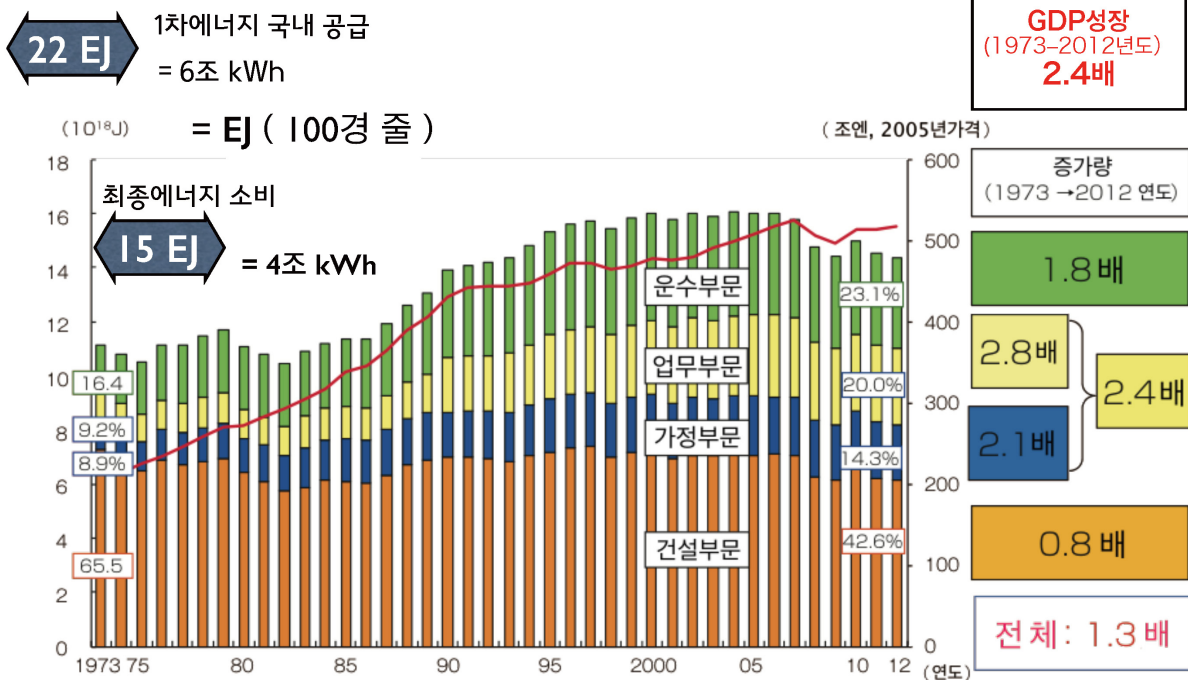
- 에너지의 지속적 이용과 환경
- 에너지 자원, 지구온난화
- 재생가능 에너지
-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방사선 환경 문제
- 후쿠시마의 환경오염과 부흥·안심
- 방사선 리스크와 인식

원전 사고에서 생각하는 에너지와 환경문제

도리이 히로유키(鳥居寛之, Hiroyuki A. TORII)

도쿄대학대학원 이학계연구과 준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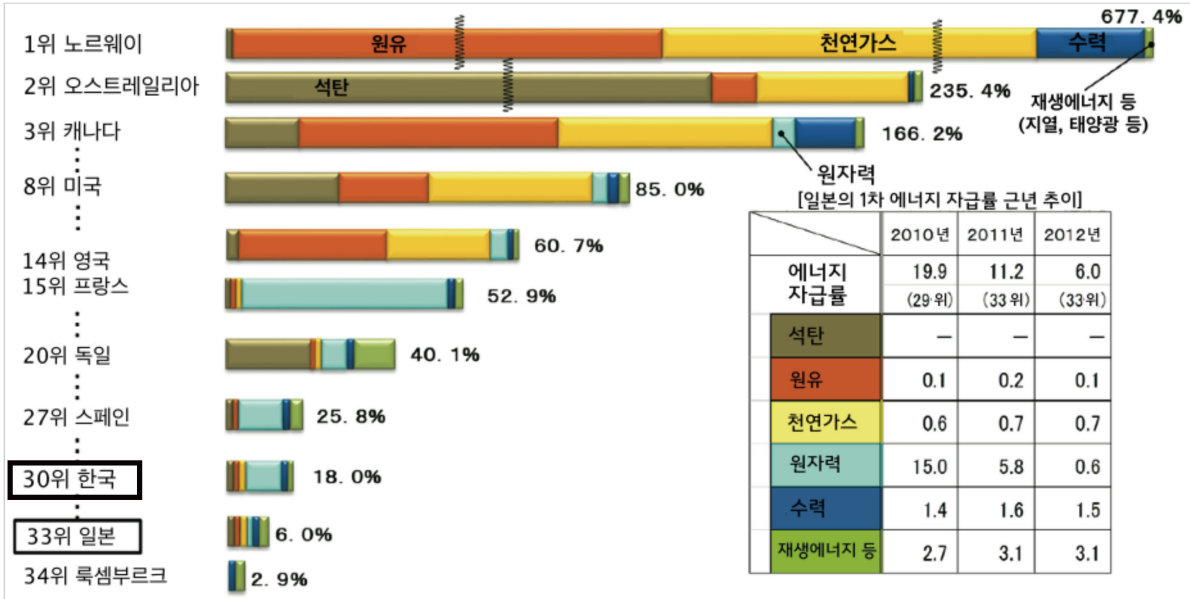
일본의 에너지 소비와 실질GDP 추이



일본 1차에너지 공급: 해외로부터의 화석연료 의존도는 92%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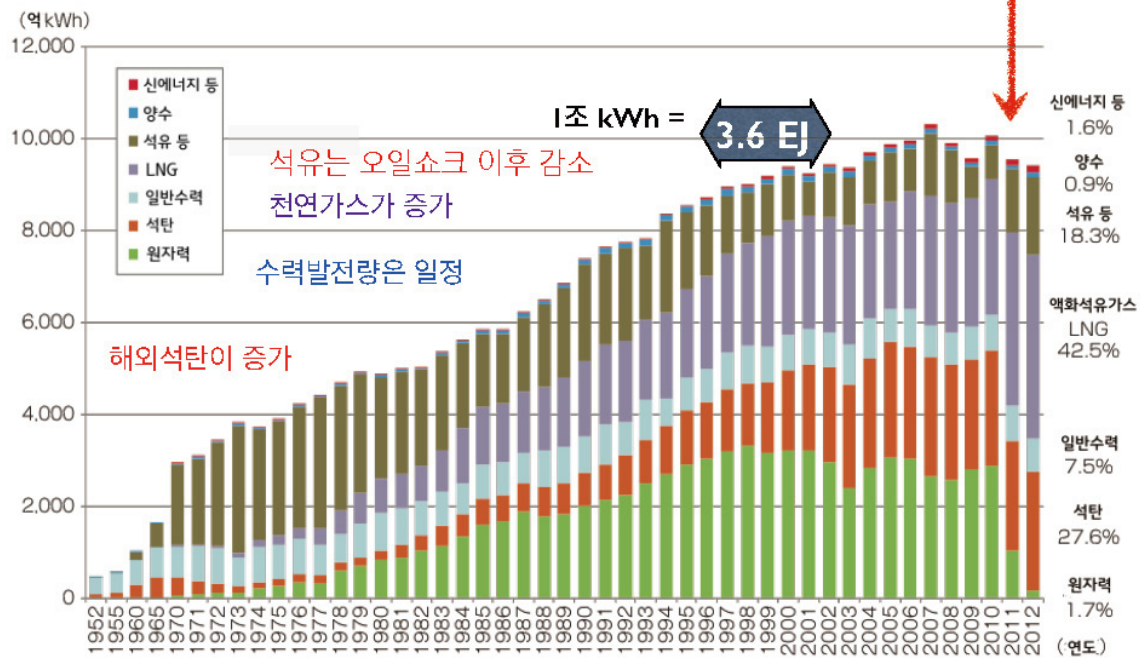
에너지 자급률

【제 111-1-1】 OECD 국가의 1차에너지 자급률 비교(2012년: 추정치)



(주1) IEA는 원자력을 1차 에너지 자급률에 포함시키고 있다.
(주2) 표 중의 '-': 매우 적음
출전: IEA 'Energy Balance of OECD Countries 2013'을 기초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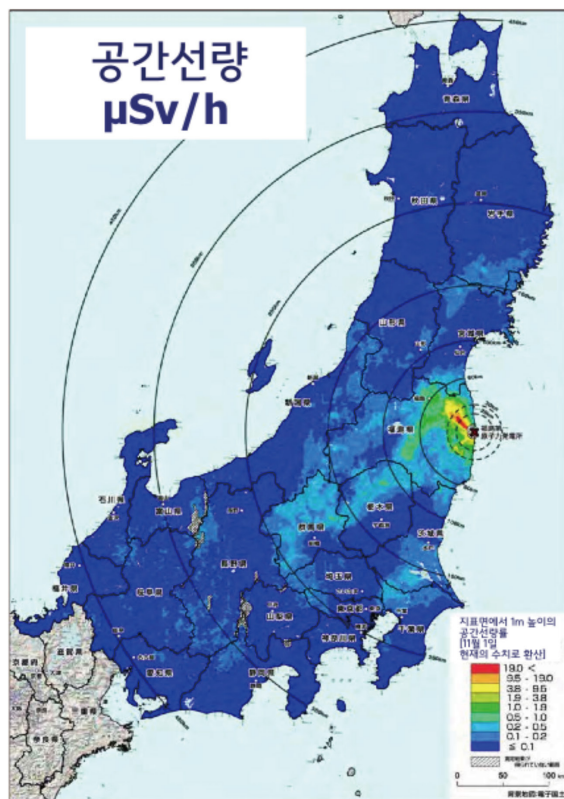
일본의 발전 전력량



(주) 1971년도까지는 9전력회사 합계.
출전: 자원에너지청 「전력원개발 개요」, 「전력공급계획 개요」을 기초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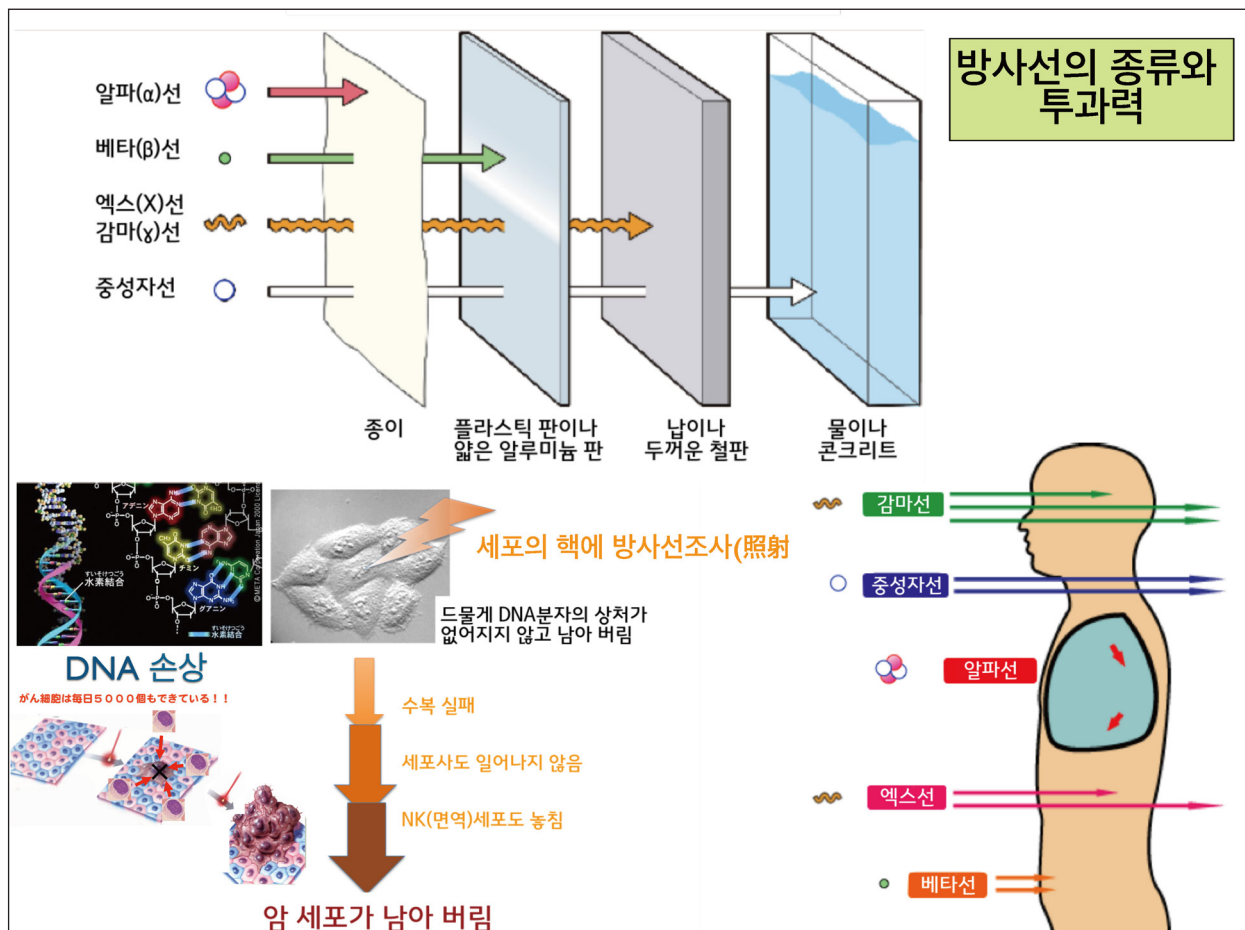
원자력이 증가
(2000년경까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에 의한 동일본 환경오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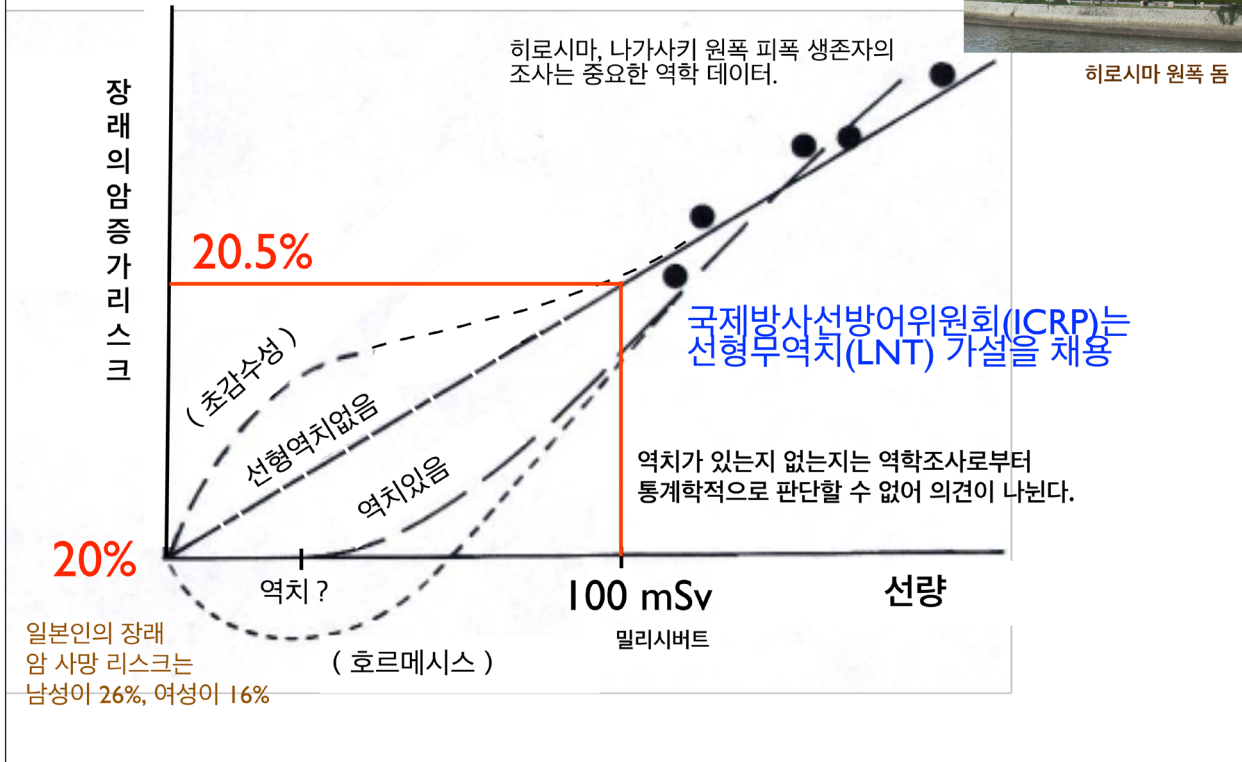


방사선을 과학적으로 이해한다

- 방사선의 영향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난립하고 있다
- 방사선에 관한 학문은 여러 분야에 이르며,
한 사람의 전문가가 다 처리할 수 없다.
- 원자력 공학, 원자핵물리학
- 방사선물리학, 방사선계측학, 방사선화학, 방사화학
- 방사선생물학, 방사선의학
- 환경학, 기상학, 해양과학, 식물학 · 토양학 (농학)
- 식품위생학
- 방사선방호학(안전관리학)
- 리스크학,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 사회학(사회과학기술론), 법률



저선량(방사선 양이 적은 상태)에서의 리스크 평가



방사선 영향에 관해 다른 의견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암의 원인이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역학조사의 문제점

통계학적 유의성

영향의 인과관계

과학적 지견과방호학의 철학의 운동

리스크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안전과 위험의 선긋기는 불가능

다른 리스크와의 상대적 비교(트레이드오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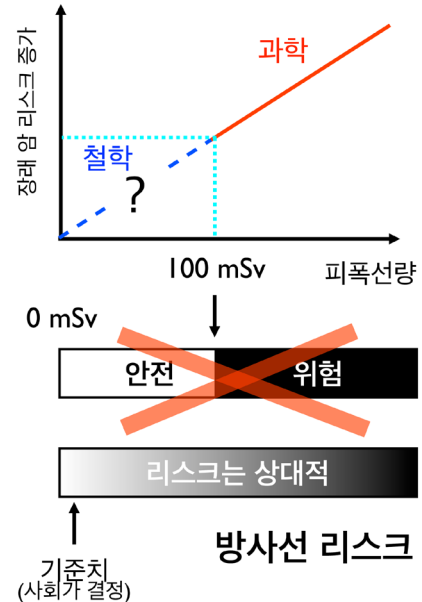
후쿠시마 주민의 리스크는?

계속 거주하는 리스크 원전작업원의 리스크는?

방사선의 영향? 일상적인 서비스의 저하/결여

피난생활에서의 리스크

익숙하지 않은 토지에서의 생활 스트레스, 생업 수입의 손실



근거 없는 과산·안심은 문제지만

도카이무라(東海村) JCO 임계사고

근거 없는 두려움이나 불안도 또한 문제

패닉, 뜬소문, 건강피해

뜬소문

뜬소문에 의한 피해는 안정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후쿠시마의 토지나 생산물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도 일정수 존재

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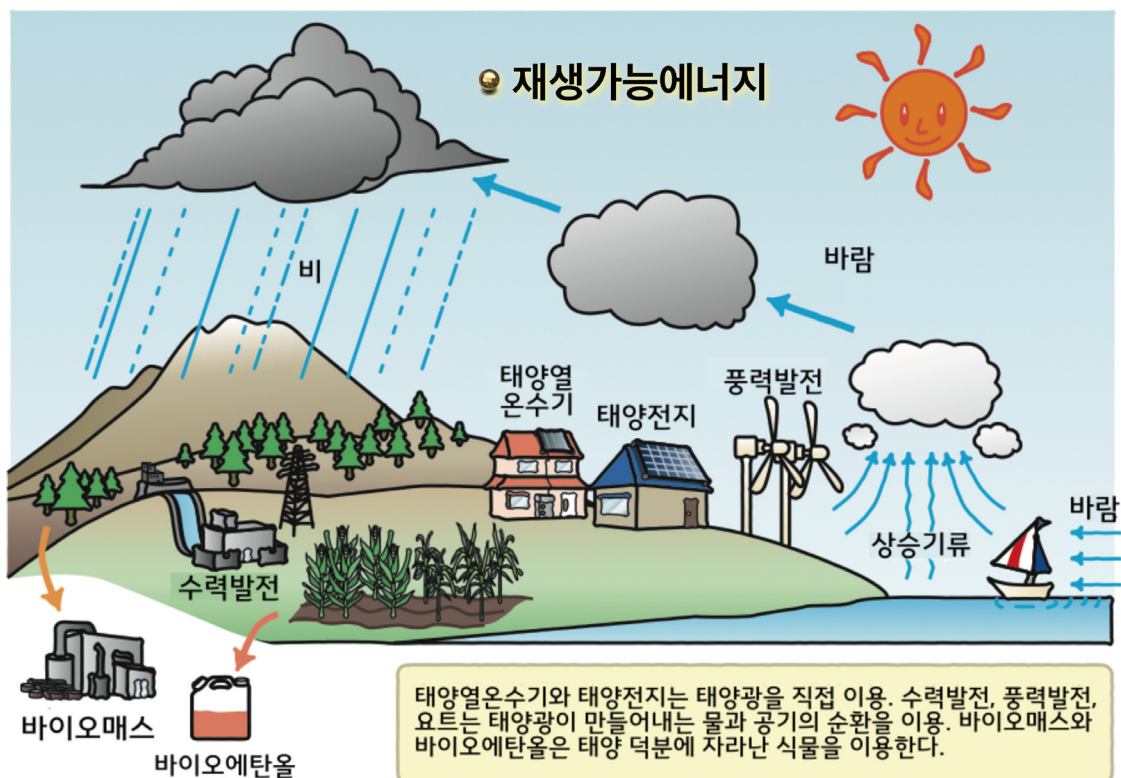
방사선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익히지 않은 채 관심이 풍화되어 가고 있다

후쿠시마 산 쌀 전량 검사



기준치 (100 Bq/kg) 초과
 0 포 / 1025만포 (2016년)
 0 포 / 1050만포 (2015년)
 2 포 / 1077만포 (2014년)
 28포 / 1100만포 (2013년)
 71포 / 1034만포 (2012년)

그림 1 태양 등 자연의 혜택이 가져다주는 재생가능 에너지



만능 에너지는 없다. 일본에는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다.

화
석
연
료

- 석탄** 풍부하고 저렴하지만, 환경오염·지구온난화 문제
- 석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비싸고 자원량도 한정적. 지구온난화.
- 천연가스** 수송이 곤란하고 비축이 어렵다. 지구온난화.

재
생
가
능
에
너
지

- 태양광** 비싸고 일조량에 따라 크게 변동한다. 120~240 GW
일본의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 포텐셜
- 바이오매스** 이용가능량이 한정적. 16 GW
- 풍력** 출력이 불안정. 원격지에 있어 송전 문제. 환경문제. 110~185GW
- 대규모수력** 댐 건설에 의한 환경파괴. 일본에서는 개발 여지가 더 이상 없다.
- 중소수력** 지역에 뿌리를 내린 사업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용가능량이 한정적 15 GW
- 태양열** 일본에서는 온수 이용은 가능하지만, 발전에는 적합하지 않다.
- 지열** 안정적이지만 개별 여지가 제한적이다. 온천지나 국립공원 23 GW
- 원자력** 사고시의 환경·사회적 영향이 크다.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
- 핵융합** 연구 도상에 있어 기술적으로 아직 곤란. 방사성물질. 개발 비용.

비용 문제도 중요. 예: 셰일가스의 개발과 원유 가격

에너지 안전 보장. 각각의 이점과 문제점을 잘 살펴본 후에 각국에서 에너지의 best mix portfolio를 선택할 필요



한·일 ‘화해학’을 시작하자: 과학기술·인문·사회융합적 ‘재난·안전공동체’구축을 위한 제언

김영근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교수

한·일 ‘화해학’을 시작하자

－ 과학기술·인문·사회융합적 ‘재난·안전공동체’ 구축을 위한 제언

김영근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교수)

I. 화해학을 시작하자

1. 화해학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한·일간에 국가 수준은 물론 개인적 차원의 다양한 ‘분쟁’이나 ‘대립’, ‘마찰’이 전개되어 왔다. 특히 한일 관계의 현황 및 상호 인식 분석을 통해 과연 그 요인을 어떻게 받아 들였는지, 어떻게 ‘화해’하려고 노력해왔는지, 아울러 분쟁(갈등)에 관한 교차점과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화해학의 유형과 실천요소를 점검(리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일 화해를 위한 재난·안전·에너지·환경 외교 등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이 글은 화해학 및 위기관리(리스크 매니지먼트) 방안을 마련하고 갈등을 넘어 화해로 가는 길 즉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과학기술·인문·사회융합적 관점에서의 제언을 목표로 한다.

‘화해학(和解學: Conciliation Studies)’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전쟁과 평화의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흔히들 “전쟁이야말로 인류가 저지르는 가장 큰 죄악이며, 인류가 목표로 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평화’라 할 수 있다.¹⁾” 사실 우리가 접하는 전쟁과 평화에 관한 의미는 너무도 다양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교과서, 미디어 등을 통해 늘상 접해온 분쟁과 평화의 여러 모습들을 학문적으로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사회, 사상, 문학, 어학, 교육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논하고 있다. 굳이 일본이 왜 전쟁에 호소했는지, 과연 정당한 전쟁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오히려 일본의 전쟁 의욕으로 인해 식민지 시대를 경험한 한국(인)으로서는 화해의 프로세스라 할 수 있는 ‘전후 처리’ 혹은 ‘전후 보상’ 문제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는다.

‘전쟁’이란 “국가와 같은 정치적 집단 간의 투쟁으로서 장기간 또는 대규모의 무력충돌을 수반하는 적대적 행위”를 의미한다. 일상에서는 “국가 상호간, 특히 주권국가 상호간에 행해지는 조직적인 무력투쟁”이라는 협의의 개념으로 한정되어 사용되고 이해된다. 넓은 개념으로, 전쟁이란 “인종·부족·민족·국가·정치단체 등과 같은 각종 집단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항(敵對)적 행동”을 의미한다. 동아시아의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비정부적(NGO)·비영리적(NPO) 대응이나 일본 시민사회의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

* “김영근(2017), “한·일 ‘화해학’을 시작하자”『한일협력』 및 김영근(2014), “한일간 위기관리의 정치경제학”『일본학보』 게재한 논문을 대폭 수정·보완한 것으로,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2-A00019).

1) 예를 들어, “전쟁이란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적에게 굴복을 강요하는 폭력행위이다.” 칼 폰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김만수 옮김(1994) 『전쟁론(Vom Kriege)』갈무리, p.46.

(재특회)>이 별이는 반한시위도 여기에 해당된다. 사회학자들은 사회과학적으로 전쟁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 전쟁을 “사회적으로 용인된 일정한 형식으로 시작하여 계속되는 투쟁, 즉 관습 또는 법에 의해 인정된 형식을 갖춘 하나의 제도”로 파악한다. 그들은 전쟁을 파병·간섭·보복·반란·폭동과 구별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그것을 구분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위와 같은 무력충돌이 대형화하여 전쟁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평화’의 사전적 정의는 “전쟁이나 갈등 혹은 적대적 행동이 없이 세상이 평온한 상태”를 가리킨다. 좁은 의미로의 평화란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평화’의 개념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위에서 설명한 ‘전쟁’의 상대적 개념으로 쓰이는 ‘전쟁’의 목적·원인·방법 등의 변화와 더불어 평화의 개념 및 범주(아젠다·이슈 등)도 달라져왔다. 예를 들어 ‘5.29 북일합의(2014년)’에서 ‘일본의 대북제재 완화’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라는 정치외교적 접근 역시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의 한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북한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대북 강경 외교 정책의 전개는 북일 간 적대적 역학관계로 이어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다자적 제도)의 진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평화로 가는 길목을 넓힌 셈이다. 6자회담 참가국 간 역학구조도 변화 속에 일본의 대북정책 변화(가능성)가 전쟁과 평화 논의에 가져다 준 정책적 시사점은 매우 유용하다. 어쩌면 전쟁과 평화 논의의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평화학(平和學: Peace Studies)은 ‘평화’ 논의와 관련한 학문으로 국가간 분쟁이나 갈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분쟁 해결의 방안(수단 및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평화 유지를 위한 제도화 및 국내적 수용 등에 주목하는 과정학(프로세스 및 메커니즘 분석)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인문사회과학적으로 시각에 그치지 않고 전쟁 방지(예방) 및 전쟁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공학까지도 융합한 학제적(inter-disciplinary) 접근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그렇다면, ‘화해학’이란 무엇인가? 분쟁해결제도 혹은 당사자간의 약속(계약이나 분쟁조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 즉 ‘화해’에 도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분야이다. 여기서 ‘화해’란 대립관계를 사이 좋게 풀어 없애고 유대 및 평화의 관계를 맺는 행위, 이로 인해 서로 일치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국가간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상호 양보하여 협정을 체결하는 외교적 권리와 의무가 우선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국가 내부의 경제적·역사사상적·사회문화적·심리적 이익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존재했던 혹은 존재하고 있는 다툼의 원인을 해소하는 과정(프로세스)도 이에 해당된다.

2. 무엇을 화해할 것인가: 한일 관계의 현황 및 상호 인식

한 국가나 개인이 다양한 ‘분쟁’의 요인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화해’하려고 노력해왔는지, 아울러 분쟁(갈등)에 관한 교차점과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화해학의 유형과 실천요소를 점검해 보자([표 1] 참조). 우선 ‘분쟁’이나 ‘갈등’이란 정치(민주화), 경제(산업화), 사회문화(자유화·합리화), 역사인식(평화사상) 등 영역별 구성요소가 대립한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분야별 행동주체 및 대립 메커니즘의 변화가 초래하는 복잡한 화해의 프로세스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전쟁과 평화 논의가 일본이나 한국, 중국 등의 국내문제만이 아니라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초국가적 재해이며, 세계 여러 나라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평화의 길로 이끌며 해결해 나가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전쟁과 평화가 초래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언어적 측면 등 이를 교차(cross)시키는 융복합적 분석시각을 바탕으로 한 학제적(inter-disciplinary) 접근이 절실하다는 의미이다.

갈등과 협력의 굴곡이 심한 한일간의 관계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위기관리의 프로세스 및 메커니즘을 명쾌히 유형화하고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화해학’의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에서 전개된 ‘전쟁’과 ‘평화’, ‘화해’ 담론이 단순히 한일관계, 나아가 동아시아 국가 사이에서 전개된 대립이 아니라, 미국이 관여하는 중층적 구도로 전개되어 왔다는 점이야말로 더더욱 화해학 이론 제시가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화해학’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자간 시점에서 벗어나 다자주의적 요인을 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서구 열강(미국)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맞물리면서, 국내(內政)의 대립구조 해결까지를 포함하는 총체적 ‘상황’의 문제였다는 시점을 도입해서 해석방법과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 다만 한일간 위기관리 및 화해(협력)를 설명하는 핵심요건과 조건 등에 관해서 ‘국제정리론(징벌적 정의)’ 및 ‘용서론(회복적 정의)’ 등 이론적 분석이라기보다는 화해를 위한 <기능적 다자간 협력론>을 제시하려 한다. 특히, 이 글에서는 우경화 혹은 내셔널리즘의 심화 등 일본의 과거회귀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아가 한일 화해를 위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표 1] 화해학의 유형과 실천요소

영역	유형	저해요인의 관리 및 실천요소
정치 (민주화)	정치적 화해 =【민주주의 이념의 공유】 ⇒지정학적 대립	정권교체의 정치: 이데올로기 전후체제, 시민혁명, 헤이트스피치
경제 (산업화)	경제적 화해 =【산업화 및 협력구조】 ⇒지경(地經)학적 대립	산업정책과 경제성장론 개발주의, 수직적 분업구조/경쟁관계, 수평적 분업구조/공생관계, 종속적 발전모델, 협력적 발전모델, 자생적(自生的) 발전모델
사회문화 (자유화·합리화)	사회적·문화적 화해 =【자유·평등·합리주의의 실현】 ⇒지사(地社)학/지문(地文)학적 대립	근대문명론 한류(韓流), 일류(日流), 재해문명론, 사회계층, 다문화공생(이민), 재일한국인, 재한일본인, 문화충돌, 종교개혁, 계몽사상가
역사인식 (평화사상)	역사·인식적 화해 =【평화사상 및 언론의 자유 실현】 ⇒ 지사(地史)학/지지(地智)학적 대립	전쟁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사 철학, 인식, 언론, 이데올로기, 학지(學知)

출처: 필자작성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우경화된 정치행동과 아베노믹스를 주축으로 하는 경제정책은 현재 일본을 대표(상징)하는 이미지라 할 수 있다. 아베노믹스의 성과 및 내셔널리즘의 진로가 더욱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우경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만 들릴 뿐 한일관계 개선이나 화해를 위한 방안들은 거의 눈의 띄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일관계의 진전, 즉 ‘화해’를 위한 새로운 발판을 만드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인은 안보외교·영토외교라는 문제 특히 일본과의 대외적 분쟁에 부닥치면 국제적 요인을 고려하기 보다는 국내적 대응에 주안을 두어 왔다. 한국의 대일 외교정책이 영토분쟁, 역사인식, 교과서 문제, 종군위안부 문제 등 특정이슈별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차별성이 있다면 왜 독특한 양상을 띠고 있을까에 주목해 보자. 최악의 외교부재(外交不在)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진전 없는 불신의 한일관계’를 이제는 풀어야 한다. 즉 ‘한일 화해학을 시작하자’라는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과거 회귀 노력, 우경화 혹은 내셔널리즘의 심화 등 갈등 현상(現況)의 제3자적 이해가 절실하다. 이에 한일간 화해를 위한 플랫폼과 시스템 구축 방안에 관해 제언하고자 한다. 기존의 이슈별 외교정책에 관해서는 선행연구를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감하며, 이 글에서는 화해(협력) 가능한 새로운 아젠다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II. 한일 화해를 위한 새로운 아젠다: 재난·안전 문화 및 에너지·환경 외교

최근 한국 정부의 대일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외교라인의 비정상화’ 혹은 ‘외교정책 부재’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영토 주권 수호 및 일본의 과거사에 적극 대응’ 입장으로 종군위안부·영토분쟁·역사인식 등 한일간의 현안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에 대해 진정한 사죄와 반성에 기초한 역사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2012년 8월 이명박 前대통령의 독도방문에 이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일본의 영향력 축소 및 3.11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경제의 침체, 정권교체 후 자민당 아베 정권의 내셔널리즘의 강화 등으로 인해 한일 양국관계는 최악의 상태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한일 화해를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대립구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수많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엄연히 해결되어야 할 숙연의 과제임에 틀림없다. 다만, 대일정책의 기초가 개인적인 변수 즉, 대통령의 세계관과 대외인식만으로 형성되고 추진된다면 이는 국가의 품격(國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국내적 정책결정과정과 미국·중국 등 국제적 변수 등을 고려하여 보다 더 전략적 차원에서 대일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나친 감정적 대응을 초래하는 행위는 자칫 대일정책 기초를 흔들리게 하며, 한일협력이라는 추동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일 화해를 위해서는 글로벌라이제이션 과정에서 생겨난 재난·안전·에너지·환경 외교 등 과학기술·인문·사회융합적 시각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아젠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아베노믹스와 한일 정치·경제 협력

일본 아베노믹스에 관한 정책적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경제성장 전략의 핵심은 일본의 산업개혁, 나아가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한국은 '새 시장, 새 수요와 새 일자리를 창출'이라는 창조경제 개념을 바탕으로 한 '가치개혁'을 추진해 온 박근혜노믹스와 달리 문재인 정부('J노믹스')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목표로 '혁신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비록 한국 정부가 일본의 아베노믹스와는 다른 일면 이질적으로 정책 추진으로 보이지만 한국과 일본 서로에게 보완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는 한국으로서도 중요한 정책사례이다. 한국 경제 및 한일관계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본과 경합·경쟁하고 있는 한국의 자동차·철강·조선 산업들은 수출에 큰 타격을 받았다.

결국 우리에게서 한국의 외교통상정책을 어떻게 확립하며 일본이 안고 있는 부정적인 전망에 대한 정책을 세울 것인지가 급선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가치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진작을 위한 구조개혁과 자유무역협정(FTA),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경제협력체에 대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베노믹스에서 배운 교훈을 한국의 경제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유용하게 쓸 필요가 있다.

아베노믹스의 부정적인 결과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베노믹스의 정책 효과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또한 창조적 한일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양국의 경제회복이 이뤄진다면 우리 정부도 효과적인 경제정책 관리와 대일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일 간 관계가 악화될수록 정치적으로는 물론 다른 분야에도 불뚝이 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무엇보다도 정치 이슈보다는 사회·문화·경제 분야를 우선시하는 정경분리나 선경후정(先經後政) 전략을 바탕으로 일본과 대화의 길, 즉 한일정상회담 프로세스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내셔널리즘의 대립 등 한일간 리스크 관리를 위한 히든카드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2. 에너지·환경 외교

자원 및 환경 갈등해소를 통한 일본의 국제협력 방안은 매우 흥미롭다. '大國(그레이트 파워)'과 '미들파워'의 중요한 차이가 물리적인 국력의 차이보다는 힘(power)을 어떻게 영향력으로 전환 시킬 수 있느냐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본의 글로벌 환경기구 참여' 프로세스에서 '미들 파워 외교(디플로머시)' 이론은 매우 의미 있다. 다만, 일본 정치지도자나 그 대항세력들이 일본외교의 '미들파워 전략'을 거의 자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인식에 따른 고정화된 대응만 되풀이 해 온 정치안보 분야와는 달리, 자원 및 환경 분야는 지방자치체의 활동이나 제도화가 중앙정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방외교론(Local Diplomacy)' 혹은 '시민사회외교론(Civil Society Diplomacy)'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일본 외무성(MOFA) 등이 환경 분야에 있어서 실시하고 있는 유연한 대응에 주목하고, 나아가 실제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협력하여 무슨 정책을 실시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에서 바라본 일본은 경제대국이긴 하지만 에너지·환경 외교에 관해 국제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리더십 발휘에 주력하고 있다. 만약 환경레짐에 관한 논의와 환경문제의 해결, 국제제도 및 국제기구적 차원의 국제레짐을 창설하는 데 있어서 일본이 주도적으로 노력하고자 할 경우, 한국도 일본의 대응 양태에 보조를 맞춰 지구 환경문제와 관련한 정치 경제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3. 재난과 안전 문화

1) 재난과 안전 이슈

국가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던 외교·통상정책이나 **재난·안전·환경·에너지·자원**정책들에 있어서도 다양한 행위자 및 예상밖(想定外)의 이슈·아젠다와 연계·융합되고 있는 시대이다. 한일 간 상존하는 위기와 점증하는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떠안고 있는 정부 및 비정부 행위자들이 무엇에 집중하여 어떻게 해결해나갈 수 있을지, 그 해답을 찾기란 쉽지 않다. 현대사회의 복잡성(Complexity)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복잡성 증가에 따른 3대 위험요인으로 ‘리스크’ 증가, ‘비용’ 증가, ‘새로운 기술’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위기관리 및 재해 거버넌스에 관한 국가 간 경계를 넘는 국제협력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 재해 연구 발전의 기점이라 할 수 있는 1995년 고베 한신아와지대지진 및 2011년 3.11동일본대지진, 중국의 2008년 <쓰촨성원촨(汶川)대지진>의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재난 발생시 ‘안전공동체’ 관점에서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3.11 동일본대지진(2011년) 이후 미증유의 복합적 재해 문제(‘대지진’, ‘쓰나미’, ‘원전사고’)가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지역적 문제, 나아가 전 세계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은 ‘4.16 세월호 침몰사고(2014년)’ 및 9.12경주지진(2016년)이라는 대형 재난을 경험했으며,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백두산화산 폭발문제, 동아시아의 원자력발전소 사고, 테러, 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및 지카바이러스 등 의료재해에 관한 탈국경적 이슈의 위기관리 및 재난(재해)학 구축을 위한 토대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일본이 2011년 3.11 동일본대지진, 구마모토 지진(2016년 4월)에서 보여준 재난대응 시스템을 한국형으로 소화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협력은 필수불가결하다. 일본의 대재해(1.17한신아와지대지진 및 3.11동일본대지진) 이후 현장재해에서 진행된 사회적 변동이나 리스크 대응 및 복구 노력 등 재후(災後 post-Disaster) 교훈을 트랜스내셔널(trans-national) 대응과 지역부흥에 다시 투영할 필요가 있다. 현장과 정부, 그리고 국가 간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이 과정이야말로 한일간의 새로운 아젠다 협력이라 할 수 있다. ‘초국가적 재해 부흥론’과 ‘한일 간 화해학’이 맞물리는 아카데미즘의 역할(이론과 실천)이 주목받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2) 일본의 안전문화, 재해부흥문화

한국이 사회안전문화를 구축하고 나아가 교육과 연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 및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일본 3·11 후쿠시마의 재해현장에서 얻은 안전문화와 관련된 교훈(田中真理·川住隆一·菅井裕行, 2016)은 무엇인가?

첫째, 3·11 동일본대지진의 복구·부흥·재생 과정에서 일본의 재해문화는 직업윤리 등 심리 교육적 측면이 중요하다. 둘째, 재해가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착안한다면, <재해문화> 혹은 <재해와 문화>라는 아젠더(agenda)는 ‘재해인류학’, ‘재해예방사회학’, ‘재해경제학’, ‘재해인지심리학’, ‘재해사상학’, ‘재해역사학’, ‘의료재해학’, ‘예방재해의학’ 등 다양한 학문영역(discipline)과 연계하여 논의되고 재해부흥 과정에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 혹은 기업, 지역커뮤니티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사회적책임(CSR)은 안전문화의 창출 및 실천(안전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한편, 재해복구/부흥/재생 과정에서 재해(재난)학의 유형과 재해 거버넌스의 변화요인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재해로부터의 복구·부흥·재생 과정에서 일본의 재해문화는 도시부흥, 사회부흥, 산업부흥, 가족부흥이라는 융복합적 재해복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한 재해의 공간(피난소, 가설주택 등) 및 재해 관련 행위자(지방자치체, 시민·기업, 국가 등), 재해 이후(災後) 물질·심리적 지원 체제와 연계되어 재해문화는 변화하기도 한다.

일본의 안전문화 및 재해부흥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일본 정권교체의 재해사회학·재해문화학’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다. 특히, 재해다발국가인 일본으로서는 대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로 평가될 경우 ‘정권교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의 민주당 정권은 굉장히 약한 정부이다. 2011년 당시 3·11 동일본대지진 이후 재해복구 및 부흥 과정에서 강한 리더십을 요청하는 상황이었으며, 이는 민주당 정권 자체가 만들어냈다. 말하자면 불안감과 우경화를 일본 내에서 양산하는 체제였다고 볼 수 있다(김영근, 2012b).” 결과적으로는 3·11 대재해가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침체된 일본경제를 가속화시킴으로써, ‘경제 불황(위기)’으로부터의 탈피하고자 하는 사회문화적 정책선호(지지기반)을 바탕으로 한 자민당 정권이 재탄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3·11 발생 직후 초기대응은 신속하게 전면전에 직접 나섰으나, 민주당 실무진의 행정절차(매뉴얼)에 대한 미숙함으로 구호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재해지역에서의 정부불신이 고조되었다. 또한 예상치 못했던 후쿠시마 원전사고까지 발생하면서 대처가 부진하고 미숙했다고 평가됨으로써, 결국 다음해 총선에 자민당으로 정권 교체되는 것에 영향이 있었다고 평가된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의 재난대응시스템 잘 되어있긴 하지만 2011년 3·11 동일본대지진과 구마모토 지진(2016년 4월)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많은 취약성과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더불어 큐슈지역이 비교적 지진발생 확률이 적었던 지역이라는 의외성이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이번 아베정부의 발 빠른 대처능력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4월 14일 1차 구마모토 지진 발생 이후, 26분 만에 언론인터뷰를 진행하며 국민 안심시키기 위해 나섰고, 이후 위기관리센터로 이동 후, 피해 상황 파악에 진력하여 재난대응 전면

직접 나서 발 빠르게 행동하는 모습이 돋보인 바 있다. 향후 아베 정권의 진로는 “초기 대응에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낸 아베총리가 재해 이후 마무리까지 현재의 평가와 지지를 이끌고 갈 수 있다면, (이는 일본의 사회문화적 요인을 제대로 정책에 반영한 형태로써)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더 단단한 지지와 탄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김영근, 2016).”

3) 문화적 교류 협력: 한류(韓流)와 일류(日流), 그리고 환류(還流)

아울러 한일간 화해의 정치경제학을 위해서는 ‘한류(韓流)와 일류(日流), 그리고 환류(還流)’ 프로세스의 활용이 중요하다. 한국의 TV드라마(K-Drama), 영화(K-Movie)를 비롯한 대중음악(K-Pop), 한식(K-Food), 오락 프로그램(K-Entertainment), 뷰티(K-Beauty), 전자정부 등 행정·제도(K-Governance) 등이 해외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는 한류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한류로 인한 문화콘텐츠와 소비재 및 관광 수출액의 증대 등 경제학적 효과는 물론이거니와 한류의 영향력은 국가 이미지까지에도 미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류의 다양한 영향 계수를 상정해 볼 수 있는 데, 그 중에서도 한일간 화해 메커니즘에서 한류의 효과가 상호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Ⅲ. 갈등을 넘어 화해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제언

현재 일본의 우경화 및 내셔널리즘이 더욱 심화되고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만이 들릴 뿐 향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들은 거의 논의 되지 않고 있다. 한일관계 악화 때 양국 경제까지 악영향을 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관계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에 유연한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진전) 및 화해를 위한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동아시아 ‘재난·안전공동체’ 구축을 위한 한일 협력의 문화적 토대 및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 3.11 동일본대지진(2011년)을 계기로 한일간의 공동위기관리체제 정비 및 재해전문가 양성 등 실천적 국제협력의 모색이 절실했다.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쓰나미와 후쿠시마원전의 방사능 문제는 ‘인류애’적 연대라는 의미에서 국제협력을 다시 모색하게 했고, 자연스럽게 동아시아 국가들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향후 한국사회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난에 대비한 대응 논리와 극복 논리를 ‘인문사회과학적·제도적·정책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아 공동체적 입장’에서 ‘실체적 대안’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국제협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일 국제협력의 방안 중 하나로 예를 들어, 초국가적 재해와 안전문제에 관한 글로벌 대응체제로서, 인재(人災)를 관리할 수 있는 인재(人才)가 필요하다. 3.11 대지진 이후 일본으로부터 얻은 교훈 중 급선무인 것은 한국 또한 원전사고 발생을 상정, 복합연쇄위기를 관리할 전문가 양성 혹은 공동 위기관리체제를 정비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글로벌 시각에서 재난을 통한 안전공동체를 모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는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탈지정학적 스탠스, 즉 ‘트랜스내셔널리즘’이 고양되어야 한다. 안전혁명을 위한 관련

행위자들의 문화적 인식이나 의식(思想)역할이 중요하다

둘째, 한일관계 개선 즉 한일간 화해(평화)와 관련된 역사·문화적 교훈을 살려, 새로운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한일간의 역사적 경험으로 살펴보다라도 한일교류는 고대사까지 이어진다. 백제문화의 전수, 임진왜란 후 한일 양국의 국교회복과 교류의 진전계기가 되었던 조선통신사, 대일관계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조선과 일본과의 약조 등은 한일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최근 자민당 아베 정권의 아베노믹스 경제정책 성과 혹은 지지여부에 대한 평가에 일본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의 경제회복 및 부흥·재생을 열망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국민의 기대가 높은 아베노믹스의 성공여부는 한일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국간에 산재해 있는 저해요인으로 작동하는 다양한 이슈들에 주목하기 보다는 경제 이슈가 선호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대일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 경제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한일 FTA 발효 등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한일간 교섭(과정) 및 조약체결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TPP, 한일 FTA, 한중일 FTA의 교섭자체로도 한일관계 개선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향후 아베 정권이 한·일, 한·중·일 FTA 타결, 동아시아지역 경제통합 구상 또는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이미지 제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일간 교섭 기회를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의 외교·안보 및 경제정책의 방향성은 상대국과의 대립과 협력의 프로세스 속에서, 어떻게 한일관계를 ‘경쟁’의 게임에서 ‘협조의 게임’으로 진전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위기관리’의 문제이다. 이때 협조의 게임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논리는 ‘정경분리의 원칙’이다. 이는 경제협력문제를 우선 논의협의를 한 이후 정치적 이슈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선경후정(先經後政)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한일 양국 관계의 외교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정경분리 원칙’이 중요하다 하겠다. 예를 들어 독도 문제를 한·일 경제협력 프로젝트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우선 정치적 프로세스와는 별도로 경제·과학·재난·안전 분야에서 새로운 정치분리형 협력 모델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정경분리 정책의 추진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한일 대화 과정 또한 돌발적인 외교교섭이 아니라 한국의 정책 의제 설정, 정책 형성, 정책 채택까지 포함한 일련의 정책결정 과정이 일반화되고 예상 가능하여 효과적인 정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향후 한국 정부의 대일관계는 일본의 대외정책기조 변화 및 동북아질서를 둘러싼 주도권 싸움 등 새로운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유연하면서도 협력적인 전략과 정책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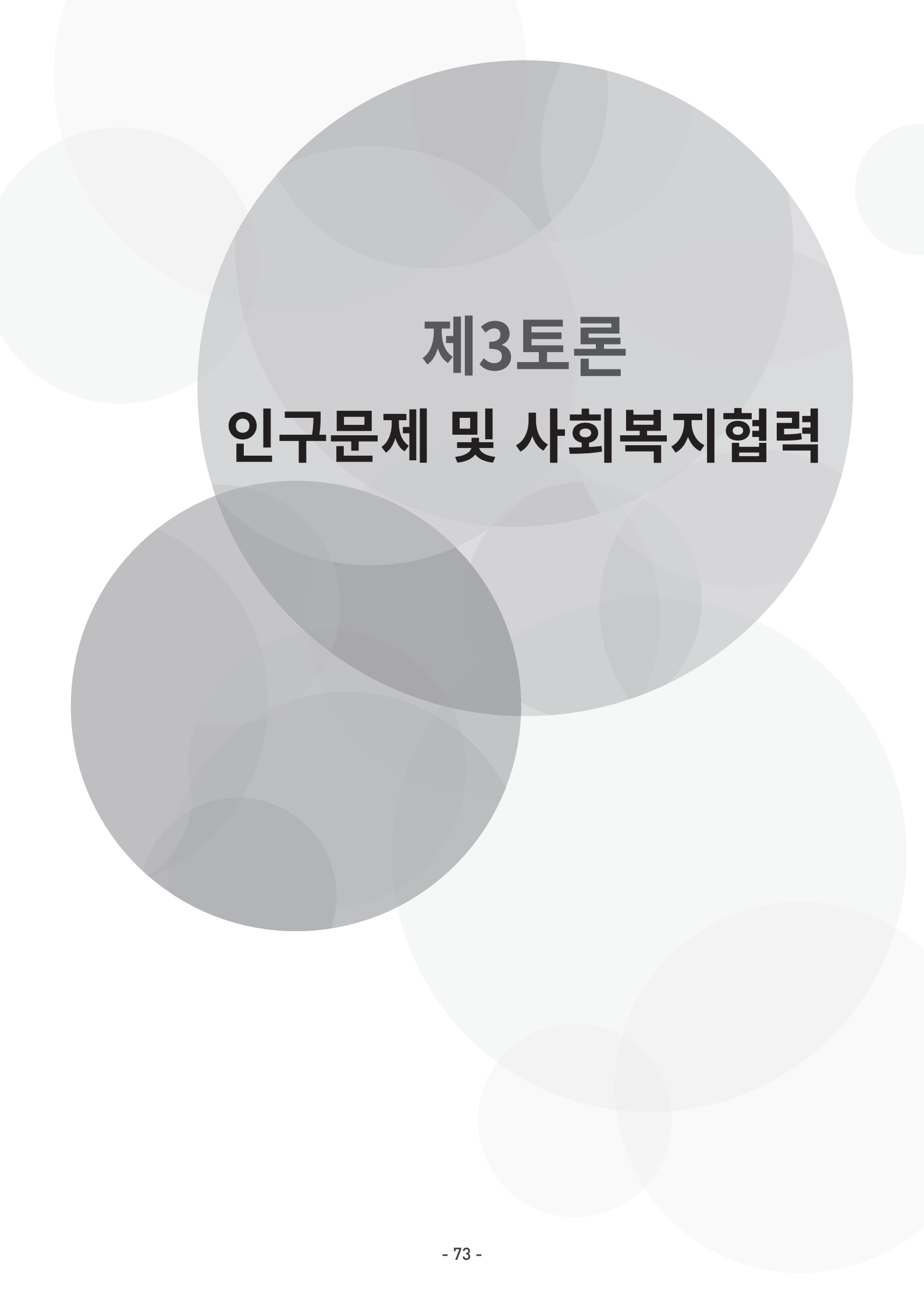
넷째, 진정한 화해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화해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새로운 행위자 및 협력 아젠다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재난과 안전에 관한 과학기술·인문·사회융합적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이나 ‘아시아 재난·안전공동체 구상’ 등 한일 교류 분야의 확대 및 진전은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화해의 역주행(逆走行)을 예방(관리)하고, 나아가 한일 화해의 종착역(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양국의 화해 비전과 전략을 공유해

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전권을 위임받아 외교협상을 진행하는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 혹은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일간 협의(교섭결과)의 효력발휘가 용이하며, 양국의 국내적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신속한 협상 타결로 이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2015.12.28.)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불가역적 최종 합의문(이번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이라는 사항에 관해서는 국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상황이기에 무효 혹은 재협상 등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불가역’이라는 외교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교신속처리권한(가칭)’을 통해 국내적 여론을 수렴하고 갈등을 해소한 상태에서 국회의 정책지지와 연계되어 외교교섭이 진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한일관계의 악화는 민간부문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어 한일간 화해를 위한 교류 협력이 중단되는 만큼 평소 한일 정부간 대화와 함께 민간차원의 과학기술·인문·사회융합적 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대책을 다양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한일간 대화채널의 부활 혹은 확대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영토분쟁, 역사인식, 종군위안부 문제 등 민감한 정치적 사안보다는 우선 용이한 한일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대화채널을 유지·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정경분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치적 대화채널에 구속받지 않는 ‘경제이슈논의 채널’의 지속가동이 중요한 시기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강조해 왔던 ‘신뢰 프로세스’ 정책을 기조로 한 외교·안보 및 경제정책에 대해 폭넓은 국내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갈등을 넘어 화로’ 가는 화해학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한일간 전제조건을 재확인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화해학’의 관점에서 제시한 여러 갈등이나 분쟁의 유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일간 화해의 로드맵과 행동계획(Action Plan)을 만들어 첫발을 내딛는 것이 주된 과제이다. 이는 장기고착화되고 있는 한일간의 비정상적인 ‘외교 부재’의 상황에서 벗어나 정상화의 시스템이 구축되는 상황으로의 전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한국은 일본과의 영토분쟁, 역사인식, 종군위안부, 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관한 시각 등 민감한 정치적 사안들을 안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내적 정책결정 과정과 미국·중국 등 국제적 변수 등을 고려해서 더욱더 전략적 차원에서 대일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국교정상화(1965)의 50주년(2015년)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한일관계사 백년대계를 고려할 때, 지금까지의 축적된 협력의 결과물들이 완전히 과거사에 파묻히거나 미래와 단절된다면 이는 한일 양국으로서는 너무도 큰 손실이라 할 수 있다. 지속적인 사회문화의 공유, 경제협력 등을 통해 ‘제로섬 게임(Zero Sum Game)’이 아닌 윈윈(Win-Win) 게임으로 전향되는 한일관계를 기대한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유연한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진정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구축, 즉 ‘화해학’을 시작하는 데 힘써야 할 시점이다.



제3토론

인구문제 및 사회복지협력



저출산 · 고령화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

진필수

서울대 일본연구소 연구교수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

진필수(서울대 일본연구소 연구교수)

1. 한국의 저출산·고령화와 일본의 경험

2017년 4월 27일 서울에서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최로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新지역발전방안>이라는 정책 포럼이 열린 적이 있다. 이 포럼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한국의 총인구는 2031년 5,29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속도의 인구감소가 진행되어 2065년 4,302만명(1990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증가율은 2032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2065년에는 -1.03%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763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이미 감소가 시작되었으며, 2065년 2,062만명 수준(약 45% 감소)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2015년 73.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2065년에는 47.9%로 가장 낮은 수준이 될 지도 모른다.

한국의 합계특수출산율(한 명의 여성이 일생 동안 낳는 자녀의 평균수, 이하 출산율)은 1983년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 이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1년 1.30명(초저출산), 2005년 1.08명(역대 최저), 2015년 1.24명을 기록하였다. 2015년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전 세계 224개국 중 220위였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2015년 82.1세까지 늘어났고, 2065년에는 90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함께 한국의 고령화율(전체 인구에서 65세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13.2%에서 2017년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넘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기준인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후 2037년에는 30%, 2058년에는 40%를 돌파할 것이며, 2065년에는 42.5%로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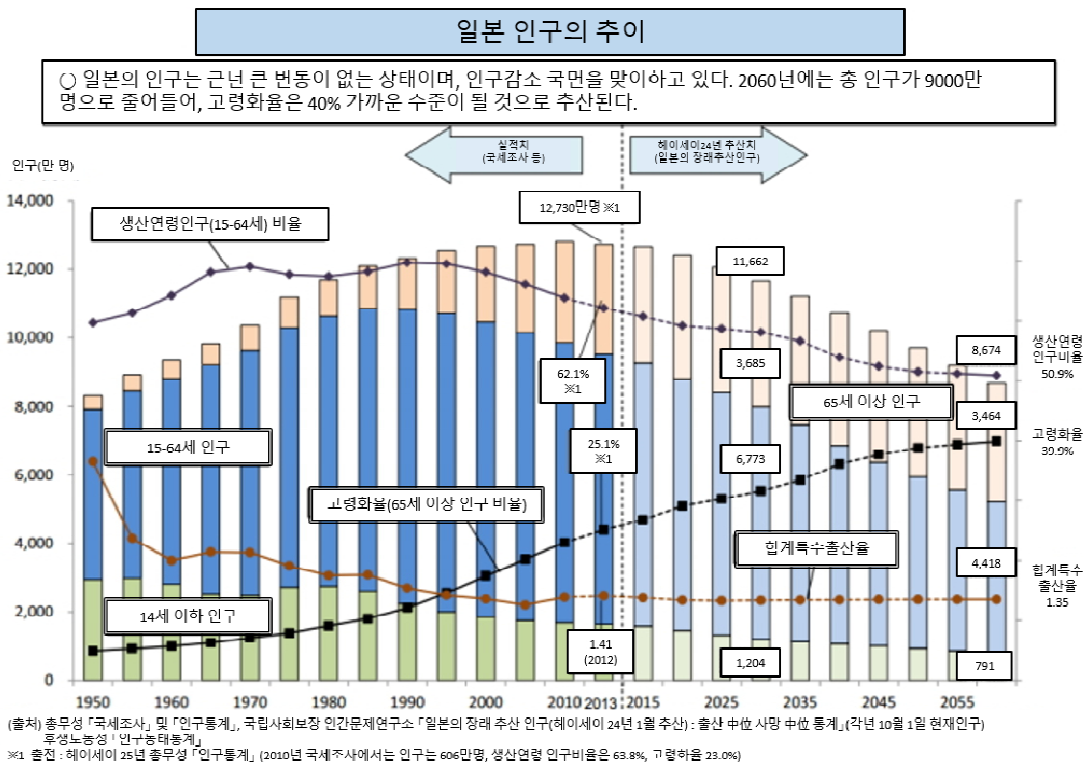
한편, 2015년 한국의 총인구 5,107만명 중 49.5%인 2,527만명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229개 시군구 중 86개(37.6%) 지자체가 초고령사회에, 52개 지자체(22.7%)가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해 있다. 특히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의 비도시지역이 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의 해체 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향후 30년 이내에 지방 고령자들의 사망과 무거주지역의 확대로 전국 229개 시군구 중 84개 군(37%), 1383개 읍면동(40%)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인구 집중 및 지방사회의 쇠퇴(지역발전 불균형)는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의 정부기관과 학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의 심각성이 인식되기 시작했고, 유효한 대책 수립이 모색되고 있다. 시민사회의 여러 주체들도 자신의 활동 분야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부분적으로 인식하고 있겠지만, 아직 자신의 실천 과제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사실 한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인구 및 사회변동에 대한 문제인식은 일본의 경험에서 자극받은 바가 크다. 최근 일본에서 제기된 지방소멸론은 한국사회의 현실과 미래상을 재검토하게 만드는 자극제가 되고 있다. 아베정권의 지방창생 정책은 이 문제들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 전후 고도성장에서 고령화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많은 부문에서 약 20년의 시차를 두고 한국보다 앞선 경험을 해 왔다. 일본의 현재를 보면 한국의 미래가 보인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구조 및 문화와 시민사회 구성의 차이로 인해 사회변동과 사회문제의 구체적 양상에는 차이가 존재해 왔고, 그에 대한 대처방식도 달라야 할 부분들이 있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론에 대응하여 시민사회의 여러 주체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는 것은 한 쪽이 다른 쪽의 경험을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황과 경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각자에게 더 유효한 실천 방안을 찾아가는 작업이 될 것이다. 한일간의 시민 교류는 서로의 같음과 다름을 인식해 가는 과정에서 많은 배움, 유익함,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2. 일본의 지방소멸론과 저출산 대책

2014년 5월 일본창성회의(日本創成會議)가 발표한 소위 마스다 보고서(増田レポート)와 동년 8월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가 출간한 『지방소멸: 도쿄일극집중이 초래한 인구급감(地方消滅: 東京一極集中が招く人口急減)』이라는 책은 일본정부의 인구정책과 지방정책을 새롭게 전환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일본창성회의의 지방소멸론은 인구학적 논의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고, 총인구 1억 유지라는 전제 하에서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일본의 출산율은 2005년 1.26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2013년 1.43까지 회복되었다.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작성한 「일본의 장래추계인구」는 출산율을 1.35로 가정할 경우 2010년 1억 2,806만명이었던 인구가 2040년 1억 728만명, 2060년 8,674만명, 2090년 5,727만명, 2110년 4,286만명으로 감소할 것이라 예측한 바 있다. 일본창성회의는 출산율을 2025년까지 일본 국민의 '희망출산율'인 1.8까지 일단 끌어올리고, 2035년까지 현상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인 2.1을 달성할 경우 2090년 일본 인구가 9,500만명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추계치를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일본창성회의는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사회적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강력한 국가전략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림 1> 일본의 인구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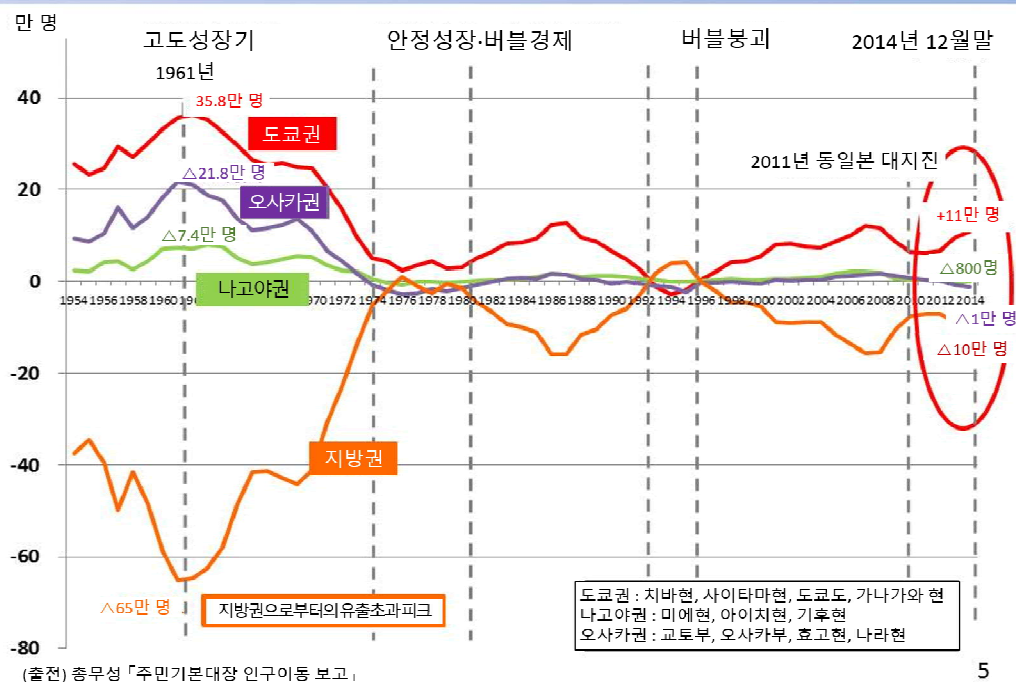
인구감소가 사회적으로 혹은 국민 개개인에게 어떤 점에서 해로운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동안 일본사회에서는 인구감소와 저성장 경제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등장하기도 했었다. 총인구 1억 유지라는 것은 대국 일본의 국격을 유지하려는 국가주의적 발상이며, 정부가 어떤 목표치를 설정해서 인구 관리를 시도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일본 창성회의는 2040년까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겹쳐진 위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고령화 문제는 태평양전쟁 직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와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연령별 인구구성의 일시적 불균형이라 할 수 있는데, 베이비붐 세대가 사망할 때까지는 저출산·소자화로 인해 경제활동인구와 납세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으로써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 제도의 붕괴와 심각한 경제침체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40년 이후 연령별 인구구성은 새로운 균형점을 찾게 되겠지만, 인구, 세수, 경제 규모가 급격한 축소의 연쇄고리에 빠져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한 국가가 인구감소에 대처하는 방법은 항상 두 가지가 있다. 출산율을 높여 자연증가를 도모하는 것과 이민자 수용을 통해 사회증가를 도모하는 것이다. 일본창성회의의 지방소멸론은 후자에 관한 정책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우수 인재의 유치라는 차별적 이민자 수용 정책만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본정부와 여러 지자체가 추진해온 일제인 이민자 수용 정책이나 다문화공생정책의 의의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일본의 많은 이민자들이 회사나 지역사회에 순조

롭게 적응하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폐쇄적 이민자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사례가 자주 보고되어 왔다. 이러한 이민자의 부적응은 지방의 청장년 인구 감소를 외국인 이민자로 대체하기 힘든 일본사회의 고민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비슷한 고민은 한국사회에도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지방사회에도 많은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가 유입되었고, 직장, 지역, 가족관계에서의 부적응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인구정책은 비혼, 만혼, 소자화, 육아, 청년실업 및 빈곤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패키지 정책을 요구하는 것인데, 지방소멸론은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는 데 특징이 있다.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지만 인구과밀 지역인 도쿄를 제외하고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공동체와 지자체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대상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 유입을 도모하는 정책을 제언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진학이나 취업을 위해 얼마 남지도 않은 지방의 청년들이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3대 도시권으로 몰려드는 극점사회의 폐해와 지속불가능성을 지적하고, 20-39세 가임기 여성의 감소율이라는 논란 많은 기준에 따라 896개(총 1799개 시정촌 중 49.8%) 소멸가능성도시를 선정·발표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일본이 도쿄 일극사회로 재편되지는 않을 것이라거나 수많은 한계촌락 중에 아직 소멸된 촌락은 없다는 식의 지엽적 비판은 있다. 그러나 일본창성회의의 지방소멸론이 인구감소 사회의 큰 흐름과 과제를 지적하고 있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유입초과수의 추이 (1954-2014)



<그림 2> 일본의 3대 도시권과 지방의 인구유출입 추이

문제는 얼마나 효과적인 인구증가 정책이 수립·추진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마스다의 저서, 『地方消滅』은 지방의 인구감소 및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의 집대성이라고 할 만하다. 결혼,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책과 함께 주거, 교육, 산업 및 고용, 마치즈쿠리(지역만들기) 등의 관련 분야 시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20-30대 청년세대의 고수입 모델 창출, 정규직고용 비율의 제고, 미혼남녀의 만남 기회 제공, 임신·출산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지식 보급, 불임치료 지원, 산후조리 지원, 출산 휴가 확대, 노동시간 단축, 노동조건 및 노동방식의 개선, 자녀교육비 축소, 포괄상담 창구 설치, 보육시설 및 보육교사 확대, 0세 아동 보육제도 검토, 다자녀 가족의 주거 지원, 1인부모 가정 종합 지원, 여성등용 확대 등 저출산 개선책이 폭넓게 열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책의 실행을 위해 기업과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발제자의 생각에는 저출산 개선책이야말로 학계의 다양하고도 심층적 연구, 그리고 시민사회 주체들의 생활 경험에 기초한 유효성 높은 제언과 실천이 필요한 부분이다. 행정과 기업의 노력이 갖는 한계는 그동안의 출산율 담보에서 잘 입증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그 개선책이 시민사회 영역의 과제로 인식되고, 다양한 주체들의 다각적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개선의 조짐이 보일 것이다.

그런데 지방소멸론에서 더 중시되는 것은 국민 전체의 출산 장려라기보다 소멸위기에 직면한 인구감소 지역의 활성화이고, 이를 위한 인구의 재배치와 국토 공간의 재편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도쿄로의 인구 유입을 막는 <방위·반전선(防衛·反轉線)>으로서 지방중핵도시와 콤팩트시티의 조성이다. 한계촌락과 같이 기본적인 생활조차 충족되지 않는 촌락들이 산재한 상황에서 각종 생활시설을 효율적으로 집적시킨 콤팩트시티나 고도의 산업시설 집적 및 특성화를 통해 도쿄에 대한 사회경제적 자립성을 확보한 지방중핵도시를 만드는 것은 시의적절하고도 매력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소위 콤팩트시티 구상은 일본 지방사회의 급격한 재편을 예고한 것이었고, 이시카와현 일대에서는 모범적 실천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한국의 정부기관에서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때 콤팩트시티 모델은 폭넓게 참조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지방소멸론에 대해 비판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은 행정 주도의 지역사회 재편과 ‘선택과 집중’의 논리이다. 전국의 모든 촌락과 지자체를 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특정 지방거점에 자원과 정책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이 논리는 적자생존의 원리를 상기시키고 있고, 고령화된 지역사회에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2014년 9월 3일 아베 내각은 <마을·사람·일 창생본부>를 설치하고 일본창성회의의 정책 제언을 실행하는 단계에 돌입하였다. 아베내각의 지방창생 정책은 일종의 지역활성화 정책으로서 기존의 여러 지역정책, 즉 지역재생법, 과소지역 대책, 한계촌락 대책과 연계되어 있다. 그리고 지자체와 지방의 시민사회가 가진 역량을 동원하고 경쟁시키는 측면이 있다. 인구감소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사회가 지속가능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출산율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우선 I턴, U턴, J턴의 방식으

로 청장년층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여야 하고, 매력 있는 지방의 이미지와 생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청장년층의 양호한 일자리와 지역경제 기반, 젊은 여성들이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선택할 수 있는 주택, 생활편의시설, 의료 및 복지 시설, 지역의 인간관계, 자녀 양육 및 교육 조건 등이 함께 구비되어야 한다. 도쿄의 삶을 기준으로 하면, 이러한 논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도쿄에는 없는 것, 도쿄와는 다른 지역만들기가 그 매력을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강조되고 있다. 도쿄는 갈수록 편리하고 윤택해지고 있지만, 거기에는 실패자, 부적응자, 거기에 없는 삶의 방식과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2014년 8월 내각관방이 실시한 조사에서 지방으로의 이주를 검토해 보고 싶다는 도쿄시민의 비율은 40.7%였고, 10년 이내에 검토하겠다는 비율이 12.0%였다. 그러나 향후 ‘매력 있는 지역만들기’가 이 사람들을 얼마나 지방으로 불러들이고 도쿄로 나가고 싶어 하는 지방의 젊은이들을 얼마나 붙잡아 둘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매력 있는 지역만들기’ 경쟁에서 지방의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3. 일본의 고령화 대책과 시민사회의 역할

일본 전국의 고령화율은 1995년 14.6%로 고령사회 기준을, 2005년 20.2%로 초고령사회 기준을 이미 넘어섰으며, 2015년에는 26.7%를 기록하였다. 비도시지역은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왔다. 도시지역에서도 고령자 거주, 고령자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발제자가 2010년 이후 연구해온 오사카 센리뉴타운은 1995년 12.5%, 2005년 26.1%, 2010년 30.2%의 고령화율을 기록하였다. 일본의 고령화 대책은 20년이 넘는 역사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0년부터 개호보험(한국의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고령자복지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고령자 정책이 상호보완성을 띠고 있지만, 한국과 비교할 때 시정촌 단위 지자체의 역할과 재량권이 크다는 데 특징이 있다. 지자체 행정이 주도해온 일본의 고령자 정책은 그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2005년 개호보험법 개정과 함께 개호지원에서 고령자 전체에 대한 개호예방과 생활 지원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2015년 발제자의 조사 당시 오사카부 스이타시의 고령자보건복지서비스 및 개호보험사업은 103개 항목에 이르고 있었다. 이 중 상당수의 사업은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효성을 확인하기 힘든 사업들도 있었다.

고령자 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과중한 부담과 행정력의 한계는 이를 비판·대체하거나 보완해주는 시민사회의 역할에 주목하게 만들고 있다. 일본에서는 고령자 복지와 관련하여 많은 시민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자치회와 같은 지역조직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들의 사회활동과 볼런티어 활동도 매우 활발하다. 인구 35만 규모의 오사카 스이타시에는 217개의 시민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 중 약 43%인 94개 단체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약 51%인 120개 단

체가 65세이상 고령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고령자 복지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시민사회가 행정의 한계를 보완하거나 극복해 준다는 긍정적 해석도 있고, 시민활동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저임금노동의 확대로 행정의 재정부담 축소를 정당화시킨다는 경제학적 해석도 있다.

한국에서는 정치경제적 이슈에 대한 시민운동이 활발하지만, 사회복지 부문의 시민운동은 부진하다. 일본의 상황과 견주어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대처는 시민사회가 약하면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서비스와 재정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고령자 복지에 드는 비용을 시민들의 세금으로만 감당해야 한다. 또한 고령자 복지는 행정 업무에 의해 표준화되거나 양적 지표로 인식되는 측면보다 질적 측면이 중요하다. 가족, 지역조직, 시민단체 등이 고령자 친화의 사회적 관행과 문화를 형성해 갈 필요가 있다. 즉 고령자 복지의 질적 수준은 시민사회의 역량에 의해 좌우된다. 서울시의 도시공동체 운동을 통해서도 지적되고 있지만, 한국은 지역조직이 약하고 가족관계의 해체도 심각하다. 향후 급속히 늘어날 고령자들의 사회적 활동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한국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사회문제, 사회복지 부문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어떻게 확대되어 갈 것인가도 앞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인구문제와 사회복지의 협력: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간병과 치료

후루야 유키히로

동남아시아의 장애아동에게 휠체어를 기증하는 모임 부대표

• 들어가는 말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태국·미얀마 등 동남아의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난 장애아동들 중에는 이동을 도와줄 휠체어만 있다면 사회와 더욱 유대를 맺을 수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2014년 7월, 장애를 딛고 근로를 하고 있는 도쿄 내의 동료들과 지인들이 함께 「NPO법인 동남아시아의 장애아동들에게 휠체어를 보내는 모임」을 설립하고, 「한국휠체어기증본부」와 협력하여 휠체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동용 휠체어 대부분이 재활용 되지 못하고 폐기 됩니다. 저희들은 사용하지 않게 된 아동용 휠체어를 다시금 쓸 수 있도록 수리해서, 가능한 현지에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3 일본에서의 활동

저희들은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UN)를 계기로 도쿄 지역을 중심으로 장애를 가진 동료들이 모임을 만들고, 노동이나 생활 면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2007년 9월 서울시에서 개최된 제7회 DPI(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세계회의 한국대회를 계기로 서울의 한벗재단과 교류를 시작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상호 방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4년 「한국휠체어기증본부」의 요청에 호응하여, 그간의 교류를 보다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NPO법인 동남아시아의 장애아동들에게 휠체어를 보내는 모임」을 설립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동료들이 협력을 해주었고, 그뿐만 아니라 휠체어 제공자인 특별지원학교PTA, 휠체어 제작회사, 수리 및 정비를 담당하는 휠체어 제작소 등도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연1회 「한국휠체어기증본부」를 방문하여 휠체어를 전달해 왔습니다.

3 2013년 4월 「한국휠체어기증본부」의 요청

1987년부터 [장애인 이동봉사대]를 만들고 휠체어가 필요한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이동약자들을 위해서 활동을 시작한 [한벗재단]은, 2011년 [한국휠체어기증본부]를 만들고 지구촌 각지의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지구촌 곳곳에는, 특히 전쟁이나 빈곤으로 인해 장애아동들이 휠체어를 구하지 못하여 집밖으로 나가서 놀지 못하거나, 한센병으로 인해 신체가 상한 환자들이 비좁은 방 안에서 침상생활만 하는 등, 세상과 소통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구촌 곳곳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휠체어를 보내는 활동은, 배낭여행을 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제 첫 걸음을 내딛게 된 [한국휠체어기증본부]의 평화순례단에 동행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들의 가장 멋진 동반자입니다.

일본의 여러분!

평화를 가꾸기 위해 조금씩 전진해 나가는 휠체어의 아름다운 여행길, 영원한 우정으로 맺어진 연대와 나눔의 길에 동참해 주십시오.

3 휠체어 기증 실적

年 月	대수	기증한 곳
2012년 10월	2	한벗재단
2013년 4월	1	서울 한국휠체어기증본부
2013년 5월	1	풀잎마을 (도쿄 방문 때)
2013년 11월	2	서울 한국휠체어기증본부
2014년 1월	2	태국 치앙마이
2014년 10월	2	서울 한국휠체어기증본부
2014년 11월	1	서울 한국휠체어기증본부
2015년 10월	2	서울 한국휠체어기증본부
2015년 11월	4	베트남 하이퐁 시(市)
2016년 10월	4	서울 한국휠체어기증본부
2017년 3월	5	베트남 하이퐁 시(市)
합계	26대	

3

2007년 9월 DPI 세계회의의 한국대회

한뼘 환영회



3

2007년 9월 DPI세계회의의 한국대회

서울시 직원들과의 교류(옛 서울시청사)



3

2010년 9월 한국 서울시 초대

「복지 현장점검과 한일장애인교류세미나」 장애물 점검



승강장 도어
지하철 탑승 ▶



지하철 내부 ▶

◀ 차량 안 휠체어 공간이
있는 위치를 표시



7

3

2010년 9월 한국 서울시 초대

세미나 모습

패널 토론회의 모습



장애인 단체와 기념촬영



8

3

사진으로 보는 교류·지원 활동

한벗재단의 그룹홈 방문



3

사진으로 보는 교류·지원 활동

2014년 1월 태국 치앙마이



3

사진으로 보는 교류·지원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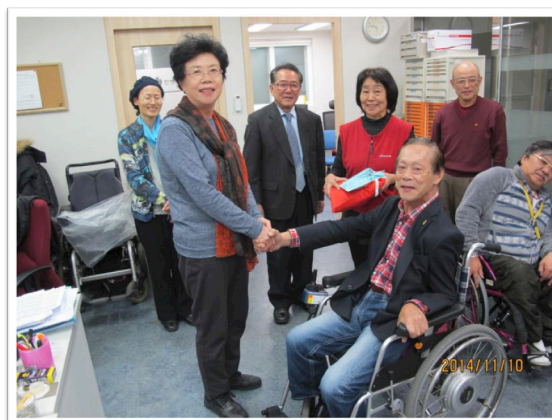
2014년 7월 휠체어를 보내는 모임 설립총회(도쿄)



3

사진으로 보는 교류·지원 활동

2014년 11월 한국휠체어기증본부 방문



3

사진으로 보는 교류·지원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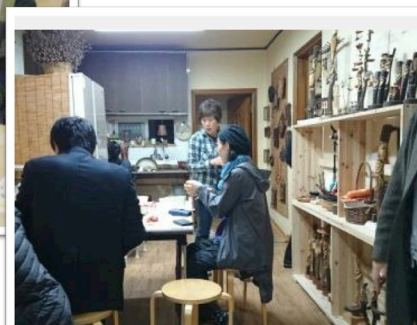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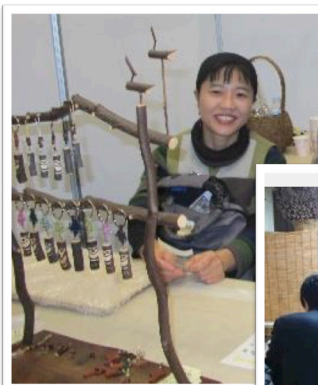
아동용 휠체어의 모습



3

사진으로 보는 교류·지원 활동

2016년 11월 휠체어기증본부, 김윤숙 씨와 작업소 방문



3

NPO법인「동남아시아의 장애아동들에게 휠체어를 보내는 모임」

향후의 전망

저희 NPO법인은 작은 시민단체입니다. 앞으로는 재정과 인재면에서 기반을 확실히 다져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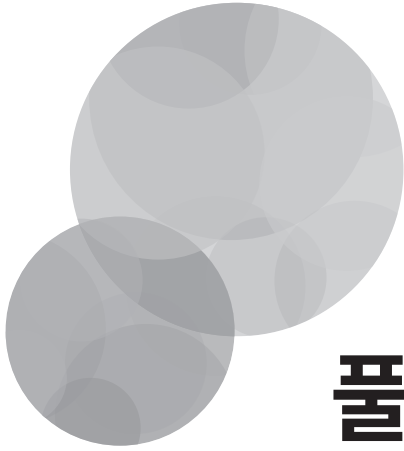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휠체어가 필요한 장애아동들에게, 사회복지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휠체어기증본부」와 연대하여 휠체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4토론

풀뿌리 협력



풀뿌리 교류에서 협력으로

이소자키 노리요
가쿠슈인대 교수

한일시민100인의 미래대화
< 세션4 > 풀뿌리 협력

풀뿌리 교류에서 협력으로

이소자키 노리요 (가쿠슈인 대학)

1

1. 들어가는 말
2. 한일 간의 풀뿌리 교류·협력의 전체 상황
한일관계와 교류의 사회 침투
한일 간 인적 왕래와 교류의 부족
지자체 간의 교류
3. 문제에 대한 접근 경험 공유와 방향성에 대한 의논

2

1. 들어가는 말

- 「풀뿌리 협력」

협력 분야가 아닌「형태」를 가리키는 것, 개별 과제는 다양

- 협력의 주체는 개인·NGO·지방자치단체 등 관민(官民)도 혼합

→「풀뿌리 협력」을 일반화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

〈접근 방법〉

「풀뿌리 교류를 통해서 어떻게 공통의 과제를 발견하고 협력을 이루어 낼 것인가. 나아가 어떻게 협력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 의논한다.

3

2 - 1. 한일관계와 풀뿌리 교류의 전개

- 교류의 시작은 1980년대 말

한국의 민주화, 자유로운 왕래(한국의 해외여행 자유화)

지방자치의 활성화

- 한일관계의 전개

90년대 역사문제의 정치쟁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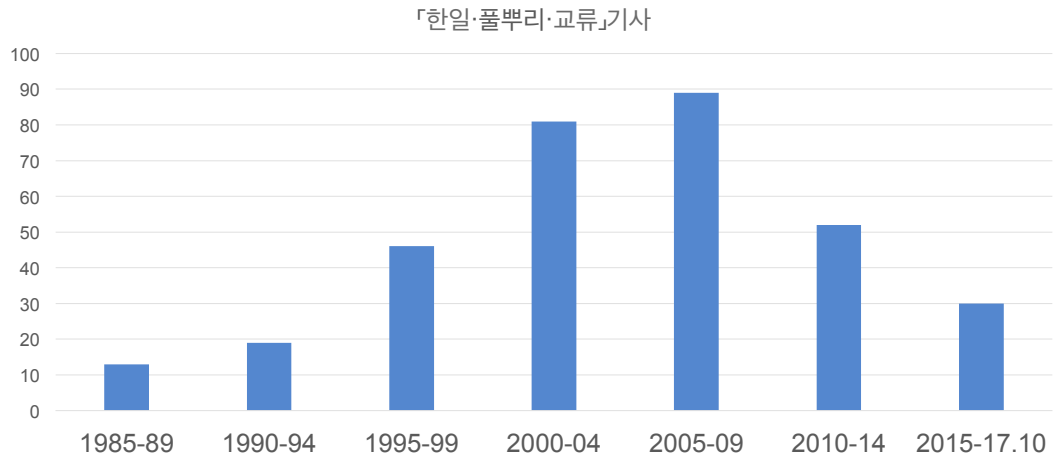
1998년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00년대 일본에서 한류붐 영토문제의 정치쟁점화

2012년~ 관계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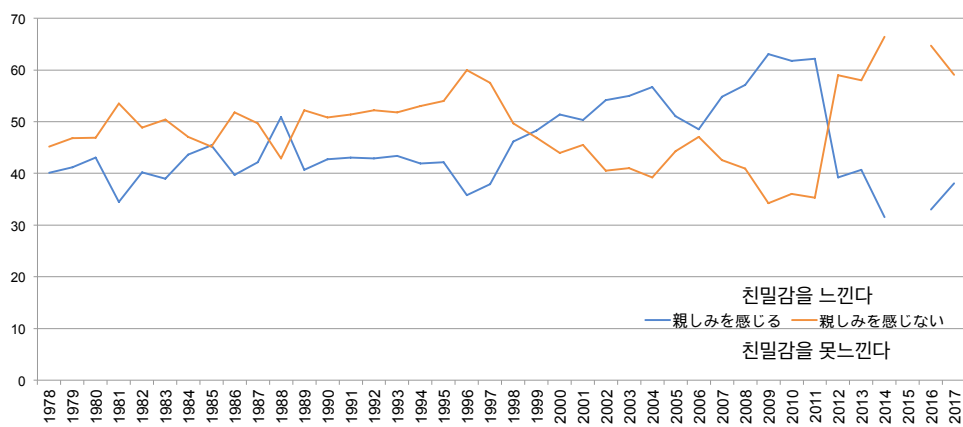
4

「한일·폴뿌리·교류」관련 기사 (아사히신문 기사DB에서 검색)



5

여론조사를 통해 본 한국에 대한 감정(내각부 조사)



6

2 - 2 . 인적 교류의 규모와 깊이

- 인적 왕래의 증가

「풀뿌리 교류」에서「풀뿌리 협력」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

- 상대방 나라의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는「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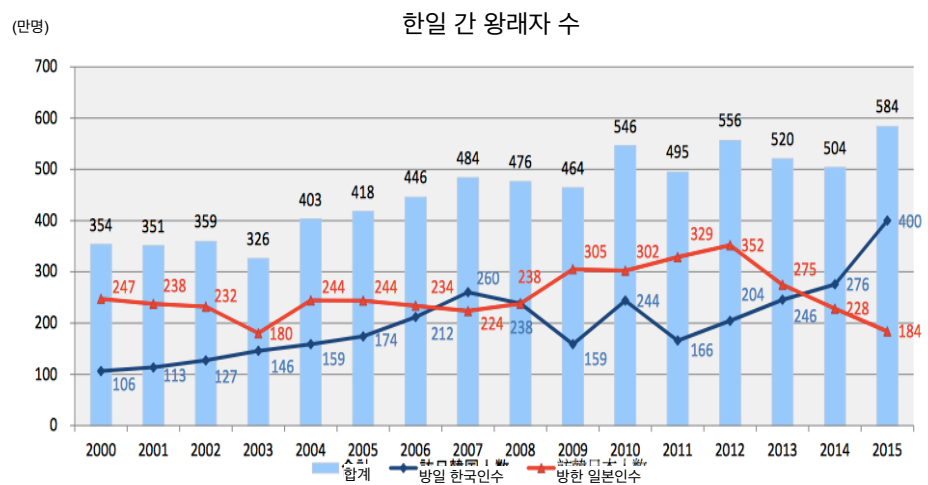
상대방 나라에 친구·지인이 없는 사람이 많음

자료 : 2016년 7월 한일공동여론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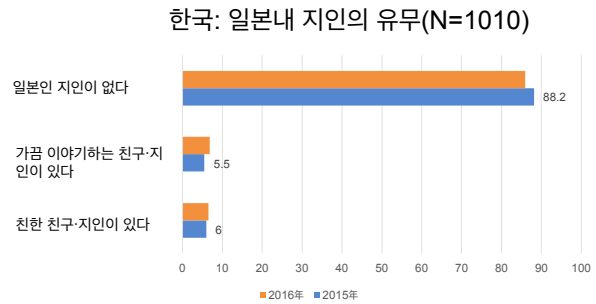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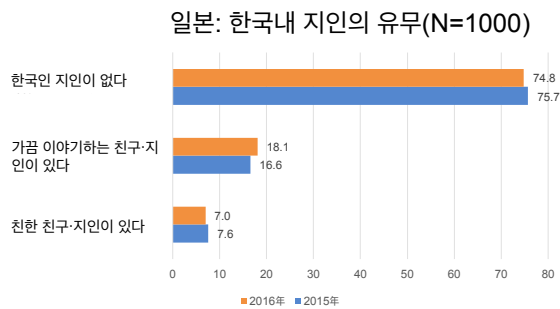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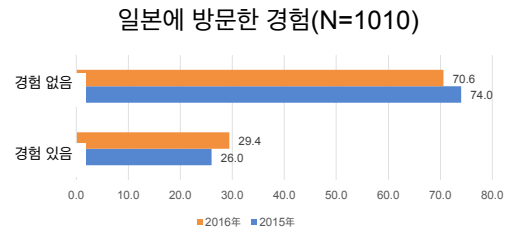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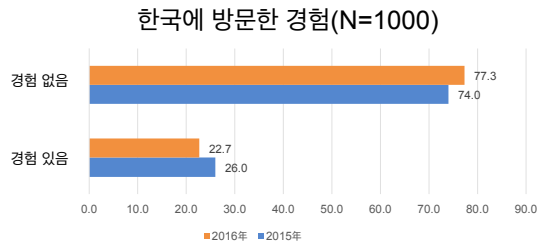
(언론NPO·동아시아연구원)

7

한일 간의 인적 왕래



3



9

2 - 3 . 지방자치단체 교류

- 일본의 지자체의 대외 교류

한국은 교류 상대국 중 3위

- 한국과의 교류 중에는「행정부문」교류가 상대적으로 많음

지자체가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에 대해 대응하는 측면

시민·주민 수준으로의 교류 확대는 약하다?

- 한국 지자체의 교류 상대국으로서 일본의 위치는 더 낮을 수도 있음

10

일본 지자체의 대외교류 데이터

전국 지자체 자매도시 체결 숫자 톱5(2017년 10월 1일 기준)

	미국	중국	한국	호주	캐나다
광역단체	25	42	19	6	2
시·구	353	279	117	78	41
마을	71	42	27	24	27
합계	449	363	163	108	70

상대국과 교류내용별 건수(2015년)

	미국	중국	한국	호주	캐나다
교육	287	100	57	72	38
문화	43	47	46	11	6
스포츠	11	26	36	11	2
의료	3	8	0	0	0
경제	6	35	14	2	0
행정	65	171	107	13	11
기타	65	38	24	7	15

자료 : 지자체국제화협회 「지자체간 교류」 자료
(<http://www.clair.or.jp/j/exchange/index.html>)

11

3 - 1 . 열린 토론을 위하여

- 풀뿌리 교류의 전체 상황
 - 한일의 국가 간 관계나 국민감정의 영향
 - 교류의 확장·심화가 부족
- 이런 상황에서, 교류·협력활동에 종사해 온 관계자에게 질문
 - 어째서「한일 간」의 풀뿌리 교류·협력이 중요한가?
 - 여러분이 교류·협력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 교류·협력의 장벽은 무엇인가?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

12

3 - 2 . 교류·협력과 역사문제(대화를 위한 질문)

- 교류·협력을 추진할 때, 일본의 식민지배 책임문제 등「역사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역사문제가 아닌 과제」를 위해서 풀뿌리 협력을 하는 경우

- ①「과거의 문제」는 굳이 건드리지 않는다
- ②상호간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역사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되므로, 어떤 식으로든 대처한다

13

3 - 3 .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과 사회로의 침투

- 풀뿌리 협력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 당사자간의 **협력과 상호 이해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각각의 사회에서,

활동을 넓히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양국의 사회에, 풀뿌리 협력이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한 토양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14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과 다 함께 의논을 시작해 봅시다!

15

한일 시민 100인 미래 대화 日韓市民100人未来対話



한일 풀뿌리 교류협력의 걸림돌과 디딤돌

박명희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

한일 시민 100인 미래대화

한일 풀뿌리 교류협력의 걸림돌과 디딤돌

2017년 11월 10일

박명희(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

한 일 시 민 1 0 0 인 미 래 대 화

■ 한일시민 100인 미래 대화

공동의 위기와 기회: 한일 협력과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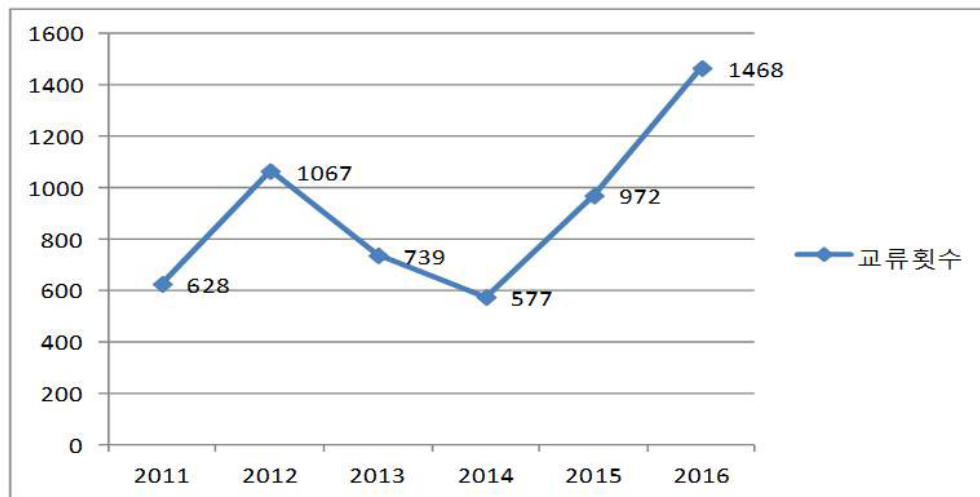
■ 풀뿌리 교류협력의 걸림돌과 디딤돌

○ 문제의식:

-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 교류의 꾸준한 증가
- 민간차원의 교류확대가 한일정부간 관계 악화 시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국가 간의 장벽을 넘은 공동의 인식 형성의 주체로서 한일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 실재는 어떠한가?
- 선순환적 한일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걸림돌 1. 한일 정부간 관계 지자체, NGO교류에 영향

한일 지자체 교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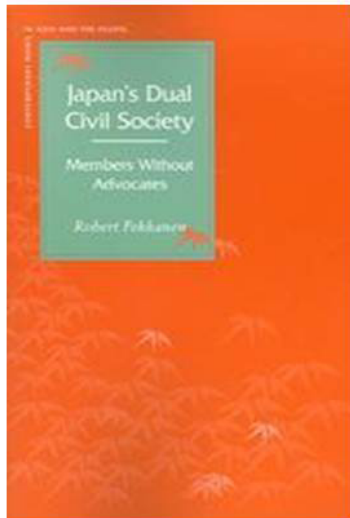


출처: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교류현황(2017)

걸림돌 2. 한일 서로 다른 성격의 시민사회

“ 동북아의 평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개 국가차원에서 보다 강화된 시민사회의 역할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양국에 있어서의 **역사인식의 차이, 우선적 관심사의 차이, 동일과제 해결방식에 있어서의 차이**가 동북아에 있어서의 평화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양국 시민사회의 교류와 연대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2002년 4월 제1회 한일시민사회포럼 공동결의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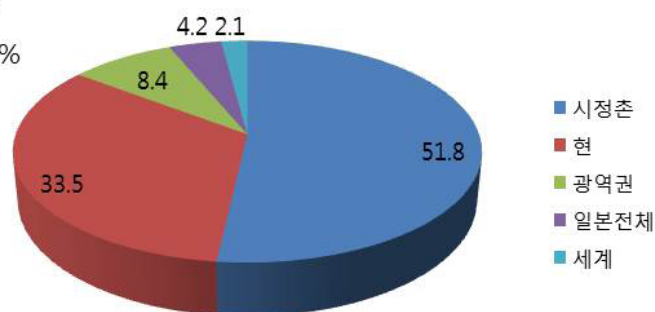
Pekkanen, Robert. 2006. *Japan's Dual Civil Society: Membership without Advocat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 일본 시민사회의 이중구조
다수의 소규모 지역단체, 소수의 대규모 전문단체
지역사회의 강한 서비스 제공기능
약한 애드보커시 기능
- 4 Small
membership, professional staff, budget, area of operation

이바라키현 NPO활동의 지리적 범위

비교: 2006년 JIGS 결과

시정촌 49%
도도부현 24.3%
광역 8.4%
전국 11.5%
세계 6.5%



한국		일본	
분류	%	분류	%
시민사회일반 (여성, 청년정치, 행정 법, 인권, 평화, 소비자)	25.2	인권옹호	1.11
		남녀평등	1.0
		자녀육성	4.7
사회복지	18.5	복지,의료	43.1
문화	15.8	교육, 문화	6.9
교육/학술	5.8	사회교육	4.0
환경	7.1	환경보전	9.8
지역자치	5.5	마을만들기	11.1
국제협력	1.1	국제협력	5.4
노동, 농어민	5.4		
종교	2.7		
경제(과학기술, 정보통신)	12.5		
		지역안전	1.8
		재해구조	1.1
		NGO단체지원	0.7
		무응답	4.4
기타	0.5	기타	4.8
합계	100		100

출처: 2000년 한국민간단체 총람, 2001년 내각부

걸림돌 3. 미디어의 프레임에 좌우되는 양국사회

EAI, 言論NPO<제4회 한일 공동 여론조사> 결과

상대국에 대한 정보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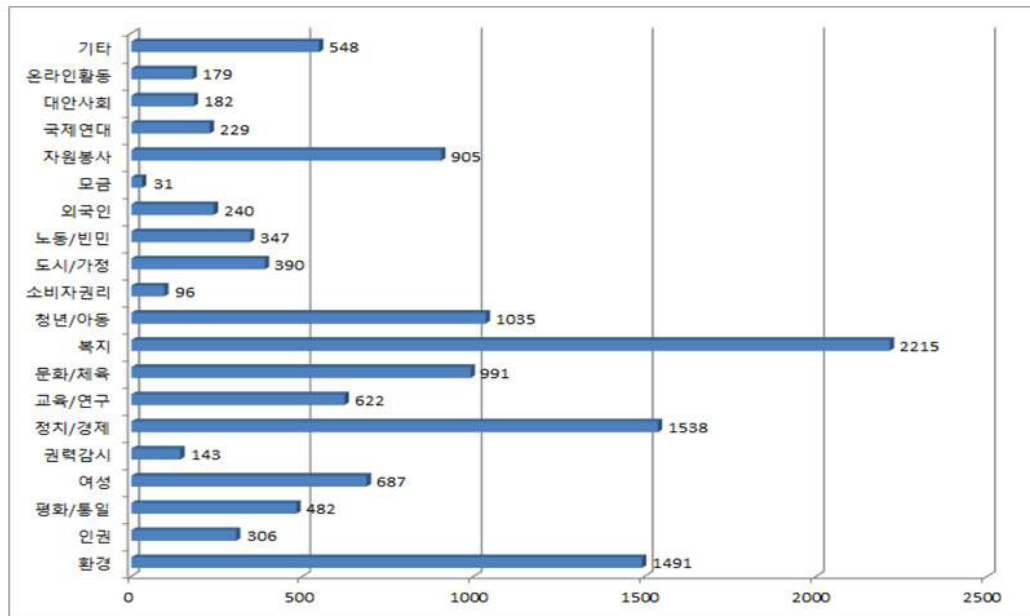
한국 94.3%, 일본 93.2% 자국의 미디어

아사히신문 18-19세 청년대상 여론조사(2016.4.8)

SNS를 가장 신뢰한다고 답한 청년 중 한국 싫다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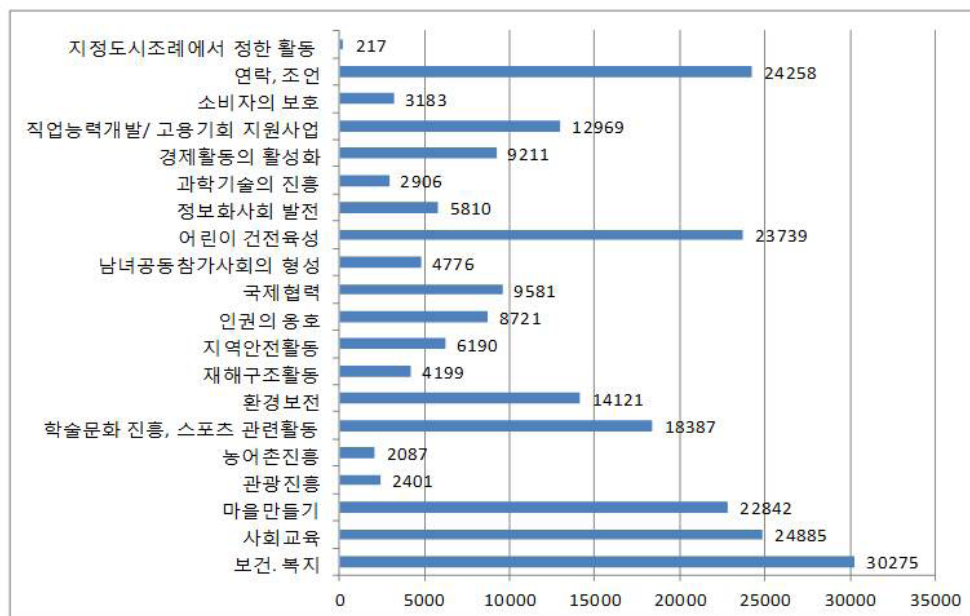
cf. 신문신뢰 청년 26%

디딤돌 1. 한국 시민사회의 성격 변화와 양국 관심사의 수렴



출처: 2012년 한국민간단체 총람

디딤돌 1. 한국 시민사회의 성격 변화와 양국 관심사의 수렴



일본 비영리활동법인의 활동분야, 2017.3.31. 전체 법인의 수 51,518개

디딤돌 1. 한국 시민사회의 성격 변화와 양국 관심사의 수렴

한국 시민사회단체 수도권 집중현상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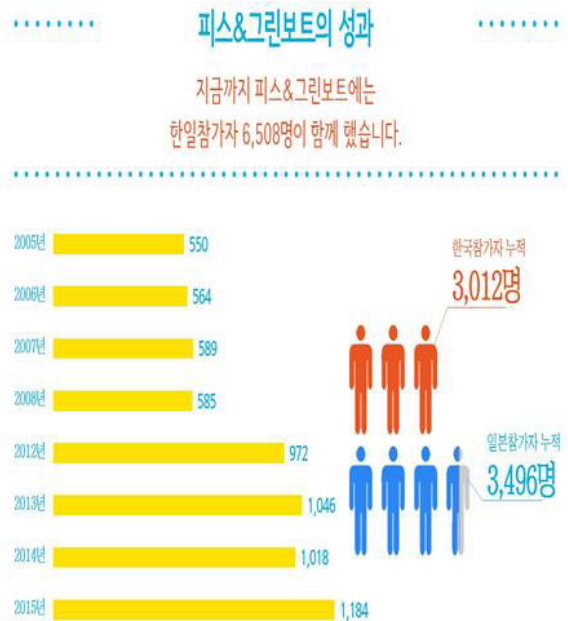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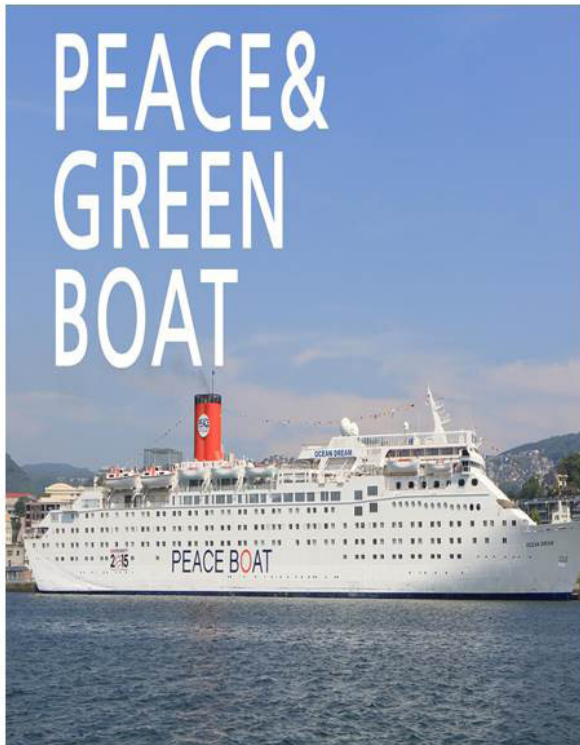
	2000	2006	2009	2017
편중률(%)	66.00	54.70	54.25	40.00

출처: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2017)

디딤돌 2. 성공적인 NGO 교류협력의 역사



디딤돌 2. 성공적인 NGO 교류협력의 역사



III. 한일 풀뿌리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

1. 한일간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확대
 - 양적 증가로 질적 변화를 모색
2. 한일 풀뿌리 교류 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안정적 자원 조달
 - 제도적 인프라의 구축
 - 자치체, NGO, 교육기관 등의 교류 정보 공유, 컨소시엄 구성
3. 학문적 관심의 뒷받침
 - 한일 시민사회의 교류, 연대운동의 역사 기록
 - 새로운 교류의 가능성 제시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